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1부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현황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주요 현황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주요 현황

조정사건 5,227건 접수처리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5,227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하였다. 2014년의 19,048건 대비 13,821건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량사건이 2014년 16,117건에서 2015년 1,908건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이하 '일반사건')은 2014년의 2,931건에 비해 13.2% 증가한 3,31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피해구제율은 2014년의 88.7%보다 감소한 77.9%를 기록했다.

대량사건 1,908건 접수·처리, 누적 건수 18,025건 기록

위원회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총 1,908건의 대량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2014년 권윤자 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가 모두 16,117건을 신청한데 이어, 2015년에도 권윤자 씨가 1,210건, 기독교복음침례회가 698건을 각각 신청했으며, 누적 건수는 18,025건을 기록하였다.
단일 매체로는 TV조선이 3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TV조선 283건, 인터넷 국민일보 90건 순이었다. 2014년, 2015년 누적 건수로는 TV조선 1,156건, YTN 1,044건, 인터넷 TV조선 987건, 인터넷 YTN 893건 순이었다. 중재부는 대량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언론사별, 쟁점별로 사건을 정리하여 일괄 처리하였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청구, 47.6% 역대 최고

2015년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건수가 2,490건으로 매체별 전체 청구건의 47.6%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청구건수 중 46.4%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건수를 기록했던 지난 2013년에 비해 1.2%P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청구건수는 3,553건으로 전체 청구건수의 68.0%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4년의 72.1%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일반사건, 뉴스1코리아가 63건으로 최다. 팟캐스트도 6건 접수

2015년 접수·처리된 사건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중 뉴스1코리아가 63건으로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기록했다.

일간지 중에는 한국일보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은 JTBC 48건, MBC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노컷뉴스가 55건, 그리고 인터넷뉴스서비스는 KBS미디어가 46건으로 해당 부문에서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기록했다.

한편 위원회는 발뉴스, 트위터매거진새가날아든다, XSFM 등 새로운 형태의 유사 뉴스서비스인 팟캐스트에 대해서도 6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복제기사 및 댓글 피해구제에 주력

2015년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원 언론보도가 포털의 블로그·카페 등에 전파되어 피해가 확산되거나 댓글로 인한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증가하였다.

위원회는 현행 언론중재법상 이러한 복제기사나 댓글 등에 대한 완전한 피해구제가 어렵더라도 양 당사자간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다만, 현행 언론중재법의 미비로 새로운 형태의 피해에 대한 구제에 한계가 있어, 향후 법률 개정 등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사건 조정액 평균 160만원, 최고 4백만원

2015년 손해배상청구액은 평균 12,582만원이었으며,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나타났다. 중앙액은 100만원이었고, 평균액은 약 160만원으로 2014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최저액은 2013년 10만원, 2014년 5만원보다 크게 높아진 반면, 최고액은 2013년 2천만원, 2014년 3천만원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일반사건의 금전배상 인용 건수는 2014년의 112건보다 다소 감소한 100건으로 전체 손해배상청구건수 1,210건 대비 8.3%를 기록했다.

■ 피해구제보도문 [정정보도]

'걱정되는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월 9일 2면에 '걱정되는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이라는 제목으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사 외압 발언을 담은 녹취록과 관련하여 언론외압 및 인사개입 대상 언론사가 KBS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BS는 이 후보자가 말한 대상 언론사가 아니었고, KBS 기자는 점심식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녹취록을 야당에 넘긴 사실도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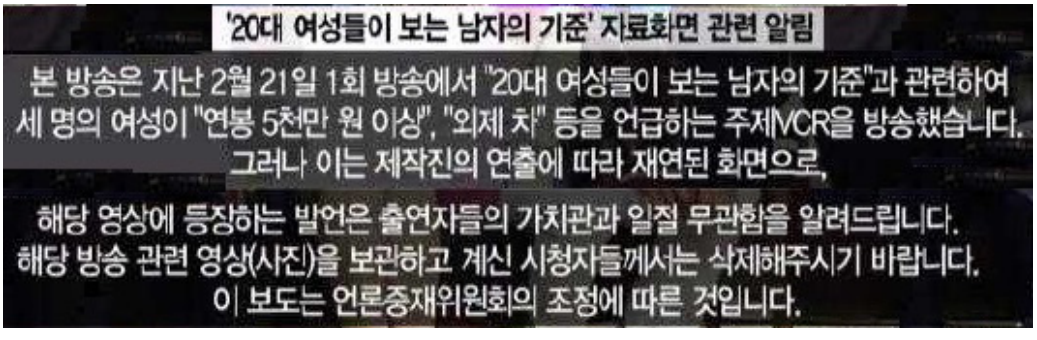
■ 피해구제보도문 [반론보도]

'영화진흥위원회 사전검열'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19일자 문화면 <부산국제영화제 '흔드는 손들'> 제하의 기사에서 "영진위가 '등급제' 개정을 추진하고, 영화제 사전심의 방식을 바꾸며 영화제 출품작을 사실상 '사전검열'하려고 시도하다 영화계의 반발에 꼬리를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등급제' 및 영화제 '사전심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며 영진위가 운영 개선을 위해 검토 중인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는 사전검열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해구제보도문 [영상 삭제]



시정권고소위원회, 기사형 광고 등 총 438건의 시정권고 결정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각종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 438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2014년 302건과 비교해 136건(45.0%)이 증가했다. 이는 기사형 광고 심의 기준이 신설되면서 기사형 광고 위반으로 95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지속적인 시정권고로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보도, 범죄수법상세묘사, 자살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는 대폭 감소한 반면, 마약 및 약물 보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4년 12월 인격영역의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사생활 보호 관련 시정권고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 관련 시정권고 건수가 2014년 25건에서 2015년 9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 공인의 사적인 생활영역까지 침범해 촬영·보도한 사례가 많았으며, 일반인의 경우 초상을 그대로 보도한 사례가 많았다.

기사형 광고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위원회는 2014년 12월 15일 기사 형태로 광고를 게재하는 '기사형 광고'의 법익 침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1월 한 달 동안 심의 대상 전 매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통해 기사형 광고의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유관기관 심의규정과 사례, 외국의 법령과 기준 등을 참고해 '기사형 광고' 심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기사형 광고' 심의는 형식적 기준, 내용적 기준, 업종별 기준을 모두 고려해 이루어졌는데 명백한 사안을 위반한 기사 총 95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70건, 뉴스통신 15건, 중앙일간지 6건 등의 순이었다.

언론조정·중재사건 현황

제1장 조정사건 접수현황

1. 연도별 현황

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5,227건의 조정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2014년의 19,048건 대비 13,821건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구원파'로 알려진 특정 종교집단과 개인이 대량으로 청구한 대량사건이 2014년 16,117건에서 2015년 1,908건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은 2014년의 2,931건에 비해 13.2% 증가한 3,31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가 2010년 처음으로 2천 건을 넘어선데 이어 5년 만에 3천 건을 돌파한 것이다.

표 1-1 최근 5년간 조정사건 접수현황 (2011. 1. 1. ~ 2015. 12. 31.)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청구 건수	2,124	2,401	2,433	19,048	5,227
전년대비 증감	-81	277	32	16,615	-13,821

2. 청구권별 현황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5,227건의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3,098건(59.3%) 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해배상청구 1,560건(29.8%), 반론보도청구 419건(8.0%), 추후보도청구 150건(2.9%) 순이었다. 지난 3년 간 청구권별 조정청구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전체 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또한 다소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전체 청구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한편 대량사건은 정정보도청구 1,558건(81.7%), 손해배상청구 350건(18.3%) 순으로 정정보도청구가 월등히 많았으며, 일반사건은 정정보도청구 1,540건(46.4%), 손해배상청구 1,210건(36.5%), 반론보도청구 419건(12.6%), 추후보도청구 150건(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청구명 \ 연 도	2013	2014	2015	합계
정 정	1,195(49.1)	12,888(67.7)	3,098(59.3)	17,181(64.3)
반 론	274(11.3)	305(1.6)	419(8.0)	998(3.7)
추 후	180(7.4)	130(0.7)	150(2.9)	460(1.7)
손 배	784(32.2)	5,725(30.1)	1,560(29.8)	8,069(30.2)
계	**2,433(100)**	**19,048(100)**	**5,227(100)**	**26,708(100)**

※ ( ) 안의 숫자는 %

3.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5년 조정청구현황을 신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에 의한 조정청구가 3,123건(59.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며, 종교단체 728건(13.9%), 일반단체 570건(10.9%), 기업체 379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량사건의 조정청구는 권윤자가 신청한 1,210건(63.4%)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신청한 698건(36.6%)이었다.

일반사건은 개인 1,913건(57.6%), 일반단체 570건(17.2%), 기업체 379건(11.4%), 지자체 117건(3.5%), 언론사 87건(2.6%), 국가기관 85건(2.6%), 교육기관 84건(2.5%), 공공단체 54건(1.6%) 순이었으며, 전체 조정청구 현황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청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4년에 비해 개인의 청구건수가 줄어들었으며, 단체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반단체, 기업체 등의 청구는 증가한 반면 공공단체와 언론사의 청구는 감소하였다.

표 1-3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신청인 \ 연 도	2013	2014	2015	합계
개 인	1,395(57.3)	13,021(68.4)	3,123(59.7)	17,539(65.7)
국가기관	36(1.5)	71(0.4)	85(1.6)	192(0.7)
지 자 체	103(4.2)	81(0.4)	117(2.2)	301(1.1)
공공단체	85(3.5)	103(0.5)	54(1.0)	242(0.9)

일반단체	255(10.5)	315(1.7)	570(10.9)	1,140(4.3)
종교단체	31(1.3)	4,954(26.0)	728(13.9)	5,713(21.4)
기 업 체	383(15.7)	331(1.7)	379(7.3)	1,093(4.1)
언 론 사	64(2.7)	90(0.5)	87(1.7)	241(0.9)
교육기관	81(3.3)	82(0.4)	84(1.6)	247(0.9)
계	**2,433(100)**	**19,048(100)**	**5,227(100)**	**26,708(100)**

※ ( ) 안의 숫자는 %

4. 매체 유형별 현황

매체 유형별 전체 청구건수는 인터넷신문 2,490건(47.6%), 방송 892건(17.1%), 인터넷뉴스서비스 799건(15.3%), 일간신문 619건(11.8%), 뉴스통신 264건(5.1%), 주간신문 138건(2.6%) 순이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피면, 신문의 경우 중앙일간지가 전체 신문 신청건의 50.9%인 3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 일간지는 30.9%인 234건, 주간신문은 18.2%인 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종합편성채널이 전체 방송 신청건의 63.6%인 5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상파TV는 26.7%인 238건, 종합유선방송이 9.7%인 87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17.0%를 차지했던 지상파TV의 신청 비율이 대폭 증가한 반면, 36.6%였던 종합 유선방송의 비율은 대폭 급감하였다. 매체 유형별 지난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청구에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청구의 비중이 45.1%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20.0%), 방송(18.6%), 일간신문(8.9%)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청구도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청구 비중은 2014년 72.1%에서 2015년 68.0%로 다소 감소했으나 인터넷신문이 전체 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인 47.6%를 기록했다.

2015년 대량사건의 매체 유형별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신문 724건(37.9%), 방송 477건(25.0%), 인터넷뉴스서비스 427건(22.4%), 일간신문 187건(9.8%), 뉴스통신 79건(4.1%)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 매체에 대한 청구가 인터넷신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일반사건의 매체 유형별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신문 1,766건(53.2%), 일간신문 432건(13.0%), 방송 415건(12.5%), 인터넷뉴스서비스 372건(11.2%), 뉴스통신 185건(5.6%), 주간신문 133건(4.0%)순이었다. 2014년에 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뉴스통신, 주간신문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반면, 인터넷신문, 일간신문, 방송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다.

표 1-4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매체유형 \ 연 도		2013	2014	2015	합계
신문	일간신문	380(15.6)	1,378(7.2)	619(11.8)	2,377(8.9)
	주간신문	142(5.9)	139(0.7)	138(2.6)	419(1.6)
방 송		288(11.8)	3,776(19.8)	892(17.1)	4,956(18.6)
잡 지		10(0.4)	25(0.1)	18(0.3)	53(0.2)
뉴스통신		112(4.6)	1,117(5.9)	264(5.1)	1,493(5.6)
인터넷신문		1,130(46.4)	8,436(44.3)	2,490(47.6)	12,056(45.1)
인터넷뉴스서비스		369(15.2)	4,177(21.9)	799(15.3)	5,345(20.0)
기 타		2(0.1)		7(0.1)	9(0.0)
계		2,433(100)	19,048(100)	5,227(100)	26,708(100)

※ ( ) 안의 숫자는 %

표 1-5 2015년도 매체 유형별 현황 (2015. 1. 1. ~ 2015. 12. 31.)

매체유형 \ 청구건수	신문			방송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기타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주간신문	지상파TV	종합유선방송	종합편성채널					
5,227	385	234	138	238	87	567	18	264	2,490	799	7
(100)	(7.4)	(4.5)	(2.6)	(4.6)	(1.7)	(10.8)	(0.3)	(5.1)	(47.6)	(15.3)	(0.1)

※ ( ) 안의 숫자는 %

5. 침해 유형별 현황

2015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4,891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93.6%를 차지했으며 초상권 침해는 205건(3.9%), 사생활 침해 56건(1.1%), 재산상 손해 51건(1.0%), 음성권 침해 14건(0.3%), 성명권 침해 10건(0.2%)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명예훼손의 청구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건수가 다소 증가하였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조정청구 비율이 증가한 것은 구원파 소속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다건의 조정을 별도로 청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 등의 청구로 이어진 사건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살인, 폭력 등의 보도에 상호명 등이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량사건은 1,908건 모두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었으며, 일반사건의 경우 명예훼손 2,983건(89.9%), 초상권 침해 205건(6.2%), 사생활 침해 56건(1.7%), 재산상 손해 51건(1.5%), 음성권 침해 14건(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 도 / 침해유형	2013	2014	2015	합계
명예훼손	2,252(92.6)	18,793(98.7)	4,891(93.6)	25,936(97.1)
초상권 침해	82(3.4)	208(1.1)	205(3.9)	495(1.9)
음성권 침해	5(0.2)	5(0.0)	14(0.3)	24(0.1)
성명권 침해	23(0.9)	8(0.0)	10(0.2)	41(0.2)
사생활 침해	45(1.8)	14(0.1)	56(1.1)	115(0.4)
재산상 손해	26(1.1)	17(0.1)	51(1.0)	94(0.4)
기 타		3(0.0)		3(0.0)
계	2,433(100)	19,048(100)	5,227(100)	26,708(100)

※ ( ) 안의 숫자는 %

6.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침해유형 중 명예훼손과 재산상 손해, 기타 사항을 제외한 인격권(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사생활 등) 침해를 원인으로 청구된 285건을 그 원인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초상이나 음성을 공표한 경우가 전체의 96.1%인 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 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한 경우가 6건(2.1%), 그리고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보도 5건(1.8%)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7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2015. 1. 1. ~ 2015. 12. 31.)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청구건수
동의 없이 무단공표	274(96.1)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보도	5(1.8)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6(2.1)
계	285(100)

※ ( ) 안의 숫자는 %

7.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2015년 접수·처리된 사건을 조정대상보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2014년과 마찬가지로 사건·사고·고발 등을 다룬 사회 분야가 4,423건으로 가장 많은 84.6%를 차지했고, 정치·선거 분야가 182건으로 3.5%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스포츠·연예 분야 118건(2.3%), 경제·산업 분야 103건(2.0%), 종교 분야 90건(1.7%), 보건복지 분야 85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연예 분야의 청구건수가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예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는 한 연예기획사의 소속 작곡가 임금 체불 논란 건과 관련해 다수사건이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표 1-8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2015. 1. 1. ~ 2015. 12. 31.)

조정대상보도 분야	청구건수
정치·선거	182(3.5)
국방·외교	33(0.6)
경제·산업	103(2.0)
사회(사건/사고/고발)	4,423(84.6)
보건·복지	85(1.6)
스포츠·연예	118(2.3)
레저·생활	21(0.4)
환경	38(0.7)
종교	90(1.7)
노동	22(0.4)
교육	38(0.7)
미디어	74(1.4)
계	5,227(100)

※ ( ) 안의 숫자는 %

8. 조정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2015년 조정사건 중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을 제외한 나머지 조정대상보도를 유형별로 살펴 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가 3,093건으로 86.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98.0%를 차지했던 2014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는 탐사·심층·기획보도가 273건(7.6%), 오피니언 103건(2.9%), 사설 46건(1.3%), 인터뷰 22건(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조정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2015. 1. 1. ~ 2015. 12. 31.)

조정대상보도 유형	청구건수
스트레이트	3,093(86.3)
사설	46(1.3)
오피니언	103(2.9)
인터뷰	22(0.6)
탐사·심층·기획보도	273(7.6)
만화·만평	2(0.1)
사진	11(0.3)
가십	
기타	32(0.9)
계	**3,582(100)**

※ ( ) 안의 숫자는 %
*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은 제외됨

한편,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보도를 세부 장르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뉴스 관련 보도가 전체 사건의 92.9%인 1,5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시사고발 관련 프로그램이 68건(4.1%), 교양정보 프로그램이 35건(2.1%)으로 뒤를 이었다.

표 1-10 조정대상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의 유형별 현황 (2015. 1. 1. ~ 2015. 12. 31.)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유형	청구건수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유형	청구건수
뉴 스	1,529(92.9)	다큐멘터리 및 토론	7(0.5)
시사고발	68(4.1)	연예·스포츠 및 드라마	6(0.4)
교양정보	35(2.1)	계	1,645(100)

※ ( ) 안의 숫자는 %

9. 중재부별 현황

2015년 중재부별 접수 현황을 보면, 4,225건을 접수·처리한 서울중재부가 전체의 80.8%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중재부 259건(5.0%), 광주중재부 214건(4.1%), 대전중재부 84건(1.6%), 대구중재부 80건(1.5%) 등의 순을 보였다.

대량사건은 서울 소재 매체가 대부분인 관계로, 1,908건 중 97.1%인 1,853건이 서울중재부에서 접수·처리되었으며, 55건만이 지역중재부에서 접수·처리되었다.

일반사건은 서울의 8개 중재부가 전체 사건의 71.5%인 2,372건을 접수·처리했으며, 경기중재부 244건(7.4%), 광주중재부 214건(6.4%), 대전중재부 80건(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중재부 가운데 광주 중재부의 청구건수가 2014년 83건에서 2015년 214건으로 2.6배 가까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특정 시장 상인회 2곳에서 52건의 조정을 청구하는 등 다수 신청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전북중재부, 강원중재부, 제주중재부의 청구 건수가 다소 증가한 반면, 경기중재부와 경남중재부의 청구 건수는 대폭 감소하였으며, 부산중재부, 대구중재부, 대전중재부는 소폭 감소하였다. 경기중재부는 2014년에 구원파 관련 대량사건이 343건이 접수된 반면 2015년에는 15건만이 접수되었다. 일반사건의 청구건수만 놓고 보면 2014년 205건, 2015년 244건으로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경남중재부의 경우 2014년 언론사간 분쟁에 따른 다수 신청이 많았던 반면, 2015년에는 다수 신청이 없는데 따른 것으로 2013년의 63건과 비교할 때 청구건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11 최근 3년간 중재부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도 / 중재부	2013	2014	2015	합 계
서울중재부	1,806(74.2)	17,750(93.2)	4,225(80.8)	23,781(89.0)
부산중재부	69(2.9)	138(0.7)	78(1.5)	285(1.1)
대구중재부	48(2.0)	113(0.6)	80(1.5)	241(0.9)
광주중재부	78(3.2)	83(0.4)	214(4.1)	375(1.4)
대전중재부	75(3.1)	96(0.5)	84(1.6)	255(1.0)
경기중재부	195(8.0)	548(2.9)	259(5.0)	1,002(3.8)
강원중재부	20(0.8)	16(0.1)	42(0.8)	78(0.3)
충북중재부	37(1.5)	71(0.4)	71(1.4)	179(0.7)

중재부 \ 연도	2013	2014	2015	합 계
전북중재부	39(1.6)	53(0.3)	78(1.5)	170(0.6)
경남중재부	63(2.6)	150(0.8)	62(1.2)	275(1.0)
제주중재부	3(0.1)	30(0.2)	34(0.7)	67(0.3)
계	2,433(100)	19,048(100)	5,227(100)	26,708(100)

※ ( ) 안의 숫자는 %

10. 접수 유형별 현황

2014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위원회 전자문서(Eye-Net)을 이용한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14년 87.9%였던 이용률은 2015년에는 53.0%로 대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2014년 구원파 대량사건 대부분이 전자문서로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대량사건을 제외하면 여전히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접수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문서(Eye-Net)에 의한 조정신청은 총 2,772건이었으며, 뒤이어 전자우편 1,913건(36.6%), 방문 409건(7.8%), 우편 130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술에 의한 신청은 단 1건밖에 없었다. 대량사건 대부분은 전자문서(Eye-Net)에 의해 접수된 바, 대량사건 또는 다수사건 신청 시에 매우 유용하고 편리한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표 1-12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도 \ 구분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자문서	구술	기타	합계
2013	336 (13.8)	137 (5.6)	1,196 (49.2)	750 (30.8)	12 (0.5)	2 (0.1)	2,433 (100)
2014	392 (2.1)	136 (0.7)	1,742 (9.1)	16,738 (87.9)	40 (0.2)		19,048 (100)
2015	409 (7.8)	130 (2.5)	1,913 (36.6)	2,772 (53.0)	1 (0.0)	2 (0.0)	5,227 (100)

※ ( ) 안의 숫자는 %

제2장 조정사건 처리현황

1. 연도별 처리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대량사건 1,908건을 포함한 5,227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 2,904건(55.6%), 조정성립 940건(18.0%), 조정불성립결정 710건(13.6%), 기각 322건(6.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표에서는 '직권조정결정'으로 표기함) 319건(6.1%), 각하 32건(0.6%) 순으로 나타났다. 대량사건의 대부분(1,645건)이 취하로 처리되어 전체 사건에서 취하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5년 피해구제율은 77.9%로 2014년의 88.7%에 비해 10.8%P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대량사건 대부분이 정정 또는 반론보도 되거나 기사삭제 혹은 기사수정 되는 등 예외적으로 피해구제율이 높았던 것으로, 2015년 피해구제율은 2013년의 77.6%와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성립률은 2014년 6.1%에 비해 3배 가까운 18.0%를 기록하였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역시 2014년의 1.3%보다 높은 6.1%를 기록했다. 그러나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5.8%에서 13.6%로 대폭 증가했으며, 기각 및 각하 비율 역시 2014년 1.0%에서 2015년에는 6.8%로 높아졌다. 이처럼 기각 및 각하 비율이 높은 것은 세월호 관련 구원파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조정 청구를 했다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경우 3,319건이 접수되어 2014년 대비 388건이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934건이 조정성립 되었고, 취하된 1,259건 중 1,008건이 피해구제되었다.

표 2-1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피해 구제율
			동의	이의					
2013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7.6%
	%	37.6	2.2	2.4	12.1	0.8	0.1	44.8	
2014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	6.1	0.7	0.6	5.8	0.6	0.4	85.8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피해 구제율
			동의	이의					
2015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	18.0	4.2	1.9	13.6	6.2	0.6	55.6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frac{\text{피해구제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 *)}}{\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 \times 100$

* 신청접수 후 심리실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의미함

2. 피해구제율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청구건수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청구 요건 적합 사건 중 조정심리 개최 여부나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진 사건의 비율을 뜻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 조정불성립 또는 취하되었으나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진 사건을 합한 것이다.

피해구제율은 2010년 79.2%를 기록했다가 위원회가 피해구제보도문의 위치·크기의 격상 등 피해구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2011년을 기점으로 71%대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사항과 그 필요성에 대해 피신청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대언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피해구제보도문 개선의 당위성을 전파했다. 이에 2012년 71.5%, 2013년 77.6%로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4년은 역대 최고인 88.7%를 기록했다. 이는 대량사건 중 취하된 15,245건 가운데 14,511건을 포함하여 취하된 전체 16,350건 중 94.3%인 15,420건이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등으로 피해구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의 피해구제율은 77.9%로 2014년에 비해 10.8%P 하락하였다. 이는 전체사건 5,227건 중 대량사건이 차지하는 비율(36.5%)이 2014년의 84.6%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다, 2015년에 접수된 대량사건들의 피해구제율(85.9%)이 2014년의 대량사건 피해구제율(92.1%)보다 훨씬 낮은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2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13. 1. 1. ~ 2015. 12. 31.)

구 분 / 연 도	청구건수(A)	기각, 각하 건수(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013	2,433	22	2,411	1,870	77.6%
2014	19,048	182	18,866	16,728	88.7%
2015	5,227	354	4,873	3,797	77.9%
계	**26,708**	**558**	**26,150**	**22,395**	**85.6%**

3.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5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추후보도청구의 피해구제율이 94.2%로 가장 높았으며, 정정보도청구 79.4%, 반론보도청구 77.6%, 손해배상청구 7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청구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15.2%, 반론보도청구 40.1%, 추후보도청구 22.0%, 손해배상청구 17.2%로, 2014년에 비해 정정보도청구 조정성립률(4.9%)은 10.1%,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성립률(6.9%)은 10.3% 각각 상승했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3,319건의 청구별 조정성립률은 정정보도청구 30.3%, 반론보도청구 40.1%, 추후보도청구 22.0%, 손해배상청구 22.1%로, 2014년 일반사건 2,931건의 조정성립률과 비교할 때 정정보도청구는 2.9%, 손해배상청구는 5.4%, 추후보도청구는 0.3% 각각 하락한 반면, 반론보도는 4.7% 상승했다.

표 2-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구분 / 연도	청구명	청구건수	처리결과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3	정정	1,195	511	29	39 (2)	155 (8)	11	2	448 (335)	74.9
	반론	274	129	8	1	18	3		115 (93)	84.9

구분 / 연도	청구명	청구건수	처리결과							피해구제율(%)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추후	180	18		2	1			159 (156)	96.7
	손배	784	258	17	15	121 (6)	6		367 (300)	74.7
	계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7.6
2014	정정	12,888	626	59	62 (1)	629 (7)	22	36	11,454 (10,904)	90.4
	반론	305	108	12	10 (1)	39 (2)	1	4	131 (117)	80.0
	추후	130	29	18	1	23	3		56 (49)	75.6
	손배	5,725	393	44	49 (1)	414 (7)	80	36	4,709 (4,350)	85.5
	계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2015	정정	3,098	470	88	48	420 (2)	63	17	1,992 (1,836)	79.4
	반론	419	168	23	12 (1)	44	37	3	132 (102)	77.6
	추후	150	33	13	2	1	12	1	88 (83)	94.2
	손배	1,560	269	94	39 (1)	245 (2)	210	11	692 (612)	73.0
	계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이 신청한 사건의 경우 취하 비율이 57.2%로 가장 높았고, 조정성립률은 15.2%였던 반면, 종교단체 사건은 취하 비율이 79.0%, 조정성립률은 2.1%에 불과했다. 일반단체 사건은 취하 47.7%, 조정성립률은 28.4%를 기록했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이 신청한 사건의 경우 취하 비율이 37.0%로 가장 높았고, 조정성립률은 24.8%를 보였다. 종교단체의 경우 취하 및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각각 30.0%를 차지하였고, 조정성립률은 36.7%를 기록했다.
한편 피해구제율은 2014년 36.6%로 가장 낮은 피해구제율을 기록했던 국가기관이 88.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종교단체 81.2%, 일반단체 80.3%, 개인 79.4%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55.1%로 비교적 낮은 피해구제율을 기록했던 지자체·공공단체의 피해구제율은 2015년에도 63.7%를 기록, 가장 낮았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구분 (연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3	개 인		1,395	481	20	25 (1)	154 (10)	11	2	702 (588)	79.6
	단체	국가기관	36	28		1	1			6 (6)	94.4
		지자체 공공단체	188	96	15	3	14			60 (48)	84.6
		일반단체	255	105	5	4 (1)	65 (4)	9		67 (44)	64.6
		종교단체	31	5	2	1	1			22 (16)	74.2
		회사	447	172	12	14	58			191 (149)	74.5
		교육기관	81	29		9	2			41 (33)	76.5
	계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7.6
2014	개 인		13,021	579	78	45 (3)	677 (15)	97	44	11,501 (10,877)	89.7
	단체	국가기관	71	19	1	12	26			13 (6)	36.6
		지자체 공공단체	184	60	3	40	16		28	37 (23)	55.1
		일반단체	351	142	22	16	24 (1)	5	3	103 (61)	73.6
		종교단체	4,954	206	8		292	4	1	4,443 (4,250)	90.2
		회사	421	121	17	9	61			213 (172)	73.6
		교육기관	82	29	4		9			40 (31)	78.0
	계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구분 / 연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5	개 인		3,123	476	122	48 (2)	369 (2)	295	27	1,786 (1,621)	79.4
	단체	국가기관	85	47	13	2	4	1		18 (14)	88.1
		지자체 공공단체	171	55	15	16	25			60 (39)	63.7
		일반단체	570	162	38	34	66 (2)	16	2	272 (241)	80.3
		종교단체	728	15	3		131	2	2	575 (570)	81.2
		회사	466	149	25	19	94	8	1	170 (128)	66.1
		교육기관	84	36	2	2	21			23 (20)	69.0
	계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5.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2015년 위원회에서 접수한 조정청구건을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로 구분해 보면 무직[1]이 1,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324건, 개인사업가 272건, 교육자 101건, 국회의원 100건 순으로 나타났다.[2]

이 가운데 공공기관장의 피해구제율이 100.0%를 기록했으며, 회사원(88.7%), 언론인(86.6%), 무직(86.1%), 주부(81.3%), 시민활동가(80.0%) 등이 비교적 높은 피해구제율을 나타냈다.

반면 피해구제율이 낮은 직업군을 살펴보면 기초광역단체장·의원과 금융업종사자가 각각 가장 낮은 50.0%를 보였으며, 이 밖에도 법조인(51.8%), 의료인(59.0%), 조합대표협회장(63.2%), 국회의원(63.6%)이 신청한 사건의 피해구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 구원파 대량사건 신청인인 유병언 전 회장의 부인이 신청한 사건은 모두 무직으로 분류됨
2) 기타 188건 및 알 수 없음 116건을 제외한 건수임

표 2-5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구분 / 직업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국회의원	100	35	6	6	20	1		32 (23)	64.6
법조인	56	3		12 (2)				41 (24)	51.8
공무원	41	19	2	2	7			11 (9)	73.2
군인·경찰	39	25	4	4	4			2 (2)	79.5
기초광역 단체장·의원	18	7			3			8 (2)	50.0
정당정치인	15	10		2				3	66.7
의료인	46	10		4	8	3	4	17 (13)	59.0
문화예술인	55	24			10			21 (18)	76.4
종교인	69	13		2	19			35 (34)	68.1
회사원	324	51	26	4	12	121		110 (103)	88.7
언론인	88	41	9		10	4	2	22 (21)	86.6
교육자	101	43			16	4		38 (26)	71.1
개인사업가	272	83	13	8	39	21		108 (95)	76.1
금융업종사자	10	4			5			1 (1)	50.0
연예인									
학 생	57	7				6		44 (33)	78.4
시민활동가	5	2						3 (2)	80.0
공공기관장	16	4						12 (12)	100.0
조합대표 협회장	57	7			17			33 (29)	63.2
주부	67	2	9		12 (2)		3	41 (39)	81.3
무직	1,383	33	48		165	25	2	1,110 (1,086)	86.1
알 수 없음	116	15	3		6	11	7	74 (32)	51.0
기타	188	38	2	4	16	99	9	20 (17)	71.3
계	**3,123**	**476**	**122**	**48 (2)**	**369 (2)**	**295**	**27**	**1,786 (1,621)**	**79.4**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6.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2014년 73.9% 가장 낮았던 잡지의 피해구제율이 93.8%로 가장 높았으며, 뉴스통신(86.8%), 인터넷뉴스서비스(80.1%), 인터넷신문(79.3%), 방송(78.8%)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68.1%로 가장 낮았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2013년 89.1%, 2014년 87.2%에 이어 2015년에도 80.1%로 3년 연속 80%대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조정성공률을 살펴보면 잡지 61.1%, 주간신문 35.5%, 일간신문 28.1%, 인터넷 신문 19.4%, 뉴스통신 17.0%, 방송 13.0%, 인터넷뉴스서비스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주간신문 26.1%, 일간신문 22.9%, 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각 12.4%, 인터넷신문 12.3%, 뉴스통신 6.1% 순이었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잡지 77.8%, 일간신문 40.3%, 주간신문 36.1%, 방송 28.0%, 인터넷신문 27.2%, 뉴스통신 24.3%, 인터넷뉴스서비스 16.9% 순으로 나타나,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와 방송의 조정성립률이 인터넷에 기반을 둔 매체보다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11.8%와 14.0%로 일간신문의 17.1%, 방송의 17.8%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표 2-6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구분 / 연도	매체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3	신 문	522	236	23	16	80 (3)	4		163 (105)	71.0
	방 송	288	136	7	6	41 (4)	10	1	87 (49)	70.8
	잡 지	10	5		3	1			1 (1)	60.0
	뉴스통신	112	32	2	2	19 (1)		1	56 (49)	75.7
	인터넷신문	1,130	420	20	29 (1)	139 (2)	5		517 (443)	78.8
	인터넷뉴스서비스	369	85	2	1	15 (4)	1		265 (237)	89.1
	기 타	2	2							100.0
	계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7.6

구분 / 연도	매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4	신 문	1,517	216	20	7	243	7	2	1,022 (957)	79.1
	방 송	3,776	99	16	19	152 (5)	18	3	3,469 (3,219)	88.9
	잡 지	25	6	4	2		2		11 (7)	73.9
	뉴스통신	1,117	70	4	7	28	22	4	982 (957)	94.5
	인터넷신문	8,436	665	60	77 (3)	473 (4)	45	52	7,064 (6,799)	90.3
	인터넷뉴스서비스	4,177	100	29	10	209 (7)	12	15	3,802 (3,481)	87.2
	계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2015	신 문	757	223	43	18	178	11	4	280 (239)	68.1
	방 송	892	116	27	15	111	72	5	546 (499)	78.8
	잡 지	18	11	2				2	3 (2)	93.8
	뉴스통신	264	45	10	4	16	21		168 (156)	86.8
	인터넷신문	2,490	482	91	55 (2)	306 (4)	108	21	1,427 (1,293)	79.3
	인터넷뉴스서비스	799	63	45	8	99	110		474 (444)	80.1
	기 타	7			1				6	0.0
	계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7.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5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명권 침해(100%)와 재산상 손해(86.0%), 음성권 침해(85.7%) 등이 비교적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인 반면, 초상권 침해(78.4%), 명예훼손(77.8%), 사생활 침해(75.0%) 등은 70%대의 피해구제율을 나타냈다. 명예훼

손의 피해구제율은 2014년의 89.1%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반면, 초상권 침해는 2014년 42.2%에서 2015년 78.4%로 대폭 상승하였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취하가 2,852건(5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성립 866건(17.7%), 조정불성립결정 683건(14.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68건(5.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상권 침해 사건의 경우는 기각이 130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취하 28건(13.7%), 조정성립 25건(12.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1건(5.4%) 순이었다.

대량사건 1,908건은 전부 명예훼손 사건으로 1,675건(87.8%)이 취하되었으며, 221건(11.6%)이 조정불성립결정되었다. 일반사건 3,319건의 침해 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한 조정신청 사건이 가장 높은 60.8%를 보였으며, 음성권 침해 50.0%, 성명권 침해 40.0%, 명예훼손 28.8%, 사생활 침해 12.5%, 초상권 침해 12.2% 등의 순이었다. 또한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사생활 침해 25.0%, 명예훼손 14.5%, 재산상 손해 5.9%, 초상권 침해 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구분 / 연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3	명예훼손	2,252	841	50	52 (2)	287 (14)	14	2	1,006 (812)	76.9
	초상권 침해	82	32	2	3	4	1		40 (33)	82.7
	음성권 침해	5	4						1 (1)	100.0
	성명권 침해	23	7						16 (15)	95.7
	사생활 침해	45	25	2	1	2			15 (12)	86.7
	재산상 손해	26	7		1	2	5		11 (11)	85.7
	기 타									
	계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7.6
2014	명예훼손	18,793	1,111	118	112 (3)	1,035 (16)	45	71	16,301 (15,387)	89.1
	초상권 침해	208	25	13	8	66	57	4	35 (24)	42.2

구분 / 연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음성권 침해	5	2	1					2 (2)	100.0
	성명권 침해	8	5	1					2 (1)	87.5
	사생활 침해	14	8		2			1	3 (1)	69.2
	재산상 손해	17	4			4	2		7 (5)	60.0
	기 타	3	1				2			100.0
	계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2015	명예훼손	4,891	866	169	99 (2)	683 (4)	191	31	2,852 (2,591)	77.8
	초상권 침해	205	25	11		10	130	1	28 (22)	78.4
	음성권 침해	14	7	2					5 (3)	85.7
	성명권 침해	10	4						6 (6)	100.0
	사생활 침해	56	7	34		14			1 (1)	75.0
	재산상 손해	51	31	2	2	3	1		12 (10)	86.0
	기 타									–
	계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8.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3)]

매체별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지면을 기반으로 한 매체의 경우 전체 574건 중 일간지 413건, 주간신문 130건, 잡지 8건 등 96.0%인 551건이 명예훼손이었으며, 재산상 손해 16건(2.8%), 초상권 침해가 7건(1.2%)으로 나타났다. 일간지 432건 중 조정성립은 174건으로 40.3%를 차지

3) 대량사건을 제외한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임. 대량사건의 매체별 처리결과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

했으며, 취하 140건(33.9%), 조정불성립결정 74건(17.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간신문 133건 중 조정성립이 48건(3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불성립결정 36건(27.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8건(21.1%), 취하 18건(13.5%) 순이었다.

방송은 415건의 청구건수 중 명예훼손이 313건(75.4%), 초상권 침해 70건(16.9%), 성명권, 음성권, 사생활 침해 등 기타 인격권 침해 23건(5.5%), 재산상 손해 9건(2.2%)을 차지했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이 116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취하 106건(25.5%), 조정불성립결정 74건(17.8%), 기각 72건(17.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42건(10.1%) 순이었다. 다른 매체보다도 기각 비율이 높은 것은 세월호 관련 구원파 개인 신도들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다건의 조정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은 2,323건의 청구건수 중 명예훼손이 2,112건(90.9%), 초상권 침해 128건(5.5%), 기타 인격권 침해 57건(2.5%), 재산상 손해 26건(1.1%)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가 987건(42.5%)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성립 589건(25.4%), 조정불성립결정 277건(11.9%), 기각 237건(10.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12건(9.1%)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이 비교적 낮고 취하나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기각이 많은 것은 세월호 관련 대량 사건이 일괄적으로 취하되거나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2,323건 중 1,766건의 청구건수를 기록한 인터넷신문의 경우는 취하가 804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성립 481건(27.2%), 조정불성립결정 209건(11.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45건(8.2%), 기각 106건(6.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372건이 접수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는 기각이 110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취하 94건(25.3%), 조정성립 63건(16.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53건(14.2%), 기각 52건(1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2015년도 세부 매체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매체유형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일간지	중앙일간지	170	165	3				2	52	24	46	10	2	36
	지역일간지	228	217					11	104	5	26			93
	경제지	18	17	1					9	1	2			6
	스포츠지	5	5						4					1
	특수일간지	6	5	1					3					3

매체유형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외국어일간지	2	1	1						1				1
	무료일간지	3	3						2	1				
	소계	432	413	6				13	174	32	74	10	2	140
주간지·주간신문	시사주간신문	7	7						4					3
	지역주간신문	66	63					3	21	16	21		2	6
	특수주간신문	35	35						11	5	11			8
	시사주간지	25	25						12	7	4	1		1
	소계	133	130					3	48	28	36	1	2	18
잡지		9	8	1					7					2
방송	중앙방송	138	111	15	1	1	4	6	37	21	32	15	2	31
	지방방송	34	32	2					7	4	10			13
	지역민방	28	25		1		1	1	17	1	2			8
	케이블tv	62	34	25	2		1		8	7	5	27	1	14
	종합편성채널	153	111	28	3	3	6	2	47	9	25	30	2	40
	소계	415	313	70	7	4	12	9	116	42	74	72	5	106
뉴스통신		185	171	7		3	2	2	45	14	16	21		89
인터넷신문		1,766	1,703	34	1	2	7	19	481	145	209	106	21	804
인터넷뉴스서비스		372	238	87	6	1	35	5	63	53	52	110		94
기타		7	7							1				6
총계		3,319	2,983	205	14	10	56	51	934	315	461	320	30	1,259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중 통신인 뉴스1코리아가 63건으로 단일매체로는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기록했다. 일간지 중에는 한국일보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의 경우 JTBC 48건, MBC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노컷뉴스가 55건, 그리고 인터넷뉴스서비스는 KBS미디어가 46건으로 해당 부문에서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차지했다.

매체별로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일간지 중 한국일보가 34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을 기록했으며, 이어 조선일보 24건, 동아일보 23건, 한겨레와 경향신문 각 19건, 중앙일보 18건, 문화일보 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레는 조정성공률이 높은 반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조정불성립결정률이 다소 높았다.

지역 일간지 중에서는 광주일보 16건, 인천일보 15건, 전북일보 11건, 부산일보 10건 등 지역의 대표적인 정론지들을 상대로 한 청구건수가 비교적 많았다. 광주일보의 청구건수가 많은 것은 모 시장상인회에서 10건의 조정청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며, 16건 중 12건이 취하되고, 4건은 조정성립 되었다.

기타 일간지 가운데는 파이낸셜뉴스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경제 5건, 매일경제 및 에너지경제 각 3건, 머니투데이,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디지털타임스, 코리아타임스, 메트로 각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JTBC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MBC-TV 45건, KBS-1TV, SBS-TV 각 42건, 채널A 38건, MBN 37건, TV조선 30건, 연합뉴스TV 24건, YTN 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BS-1, 2TV를 합칠 경우(지역 계열방송사 제외) 모두 51건으로 JTBC보다도 많은 건수를 보였다. 주요 방송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의 청구건수가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청구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방 방송에서는 지역민방인 KBC-TV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 KBS-1TV 7건, 청주KBS-1TV, G1강원민방 각 5건, KNN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KBS의 경우 조정성립률 31.4%, 조정불성립결정률 9.8%를 보인 반면, MBC는 조정성립률 17.8%, 조정불성립결정률이 33.3%로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SBS의 경우는 조정성립률 30.9%, 조정불성립결정률 28.6%를 보였다. 종합편성채널 중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기록한 JTBC는 조정성립률 33.3%, 조정불성립결정률 14.6%를 기록했다.

뉴스통신의 경우 뉴스1코리아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합뉴스 46건, 뉴시스 39건, 아시아뉴스통신 21건 등의 순이었다. 뉴스1코리아의 경우 조정성립률은 20.6%, 조정불성립결정률은 11.1%인 반면 취하율이 44.4%로 비교적 높았으며, 연합뉴스 역시 취하율이 52.2%로 매우 높았고, 조정성립률은 15.2%였다.

일간지를 제외한 주간신문, 주간지, 잡지 등 기타 지면 매체 가운데는 시민의소리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사저널 7건, 한려투데이, 충청리뷰 각 5건, 남해시대, 유교신문, 주간경향 각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의소리에 대한 청구건수가 많은 것은 모 시장상인회에서 10건의 조정청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신문은 노컷뉴스가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닷컴 45건, 온라인 중앙일보 44건, 인터넷

경향신문 42건, 인터넷 한국일보 40건, 동아닷컴 37건, e머니투데이가 32건, 인터넷 한겨레 31건, 세계닷컴 30건, 인터넷 국민일보 23건, 인터넷 미디어오늘 22건, 아시아경제닷컴 19건, 오마이뉴스 18건, 아시아투데이닷컴 17건, 인터넷 문화일보 16건, 인터넷 헤럴드경제, 아주뉴스 각 15건, 매경닷컴, 인터넷 일요시사, 인터넷 일요신문 각 14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 인터넷신문으로는 인터넷 인천일보 17건, 인터넷 광주일보와 인터넷 시민의소리가 각 16건을 기록했다. 노컷뉴스의 경우 조정성립률이 18.2%로 조정불성립결정률 27.3%보다 낮았다.

한편, 인터넷뉴스서비스는 KBS미디어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연합뉴스TV 39건, SBS 콘텐츠허브 및 인터넷 MBN 각 38건, 인터넷 JTBC 35건, 인터넷 채널A 28건, 인터넷 TV조선 26건, 인터넷 YTN 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KBS미디어의 경우 직권조정결정이 32.6%로 가장 높았고, 취하 23.9%, 기각 19.6% 순이었다. 포털사이트의 경우 네이버 13건, 다음 12건, 네이트, 줌 각 7건 등의 순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표 2-9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중앙일간지	경향신문	19	19						8	2	6			3
	국민일보	5	5						2	1	2			
	내일신문	1	1							1				
	동아일보	23	23						6	4	6	1		6
	매일일보	4	4								3			1
	문화일보	14	12	2					2	5	2	2		3
	서울신문	4	4						4					
	세계일보	5	5											5
	조선일보	24	23	1					6		5	7		6
	중앙일보	18	18						5	1	6		2	4
	한겨레	19	19						9	3	5			2
	한국일보	34	32					2	10	7	11			6
	소계	**170**	**165**	**3**				**2**	**52**	**24**	**46**	**10**	**2**	**36**
지역일간지	강원도민일보	4	4						2					2
	강원일보	5	5						1					4
	경기도민일보	1	1											1
	경기일보	6	6						1					5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일간지	경기일보	6	6						1					5
	경남도민신문	5	5						3		2			
	경남도민일보	2	2											2
	경남매일	1	1						1					
	경남신문	1	1											1
	경북도민일보	2	2						2					
	경북매일	6	6						4					2
	경북일보	1	1						1					
	경인매일	1	1						1					
	경인일보	6	6						1	2	3			
	경인종합일보	1	1						1					
	광남일보	8	2					6	8					
	광주매일신문	1	1						1					
	광주일보	16	16						4					12
	국제신문	2	2											2
	금강일보	1	1											1
	기호일보	2	2						1					1
	내외일보	3	3						2					1
	대경일보	2	2											2
	대구광역일보	3	3								3			
	대전일보	1	1											1
	대전투데이	2	2						2					
	동양일보	2	2								2			
	매일신문	3	3						2					1
	무등일보	3						3	3					
	부산일보	10	10											10
	새전북신문	6	6						1		2			3
	서울매일	1	1											1
	서울일보	2	2						2					
	세종매일	5	5						5					
	수도권일보	1	1						1					
	신아일보	2	2						2					
	아시아타임즈	3	3						2					1
	아시아투데이	3	3						3					
	영남일보	7	7								2			5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일간지	우리일보	1	1						1					
	영남일보	7	7								2			5
	우리일보	1	1						1					
	인천일보	15	15						9					6
	일간뉴스경남	2	2								2			
	전남도민일보	7	7						6					1
	전남매일	2	2						2					
	전남일보	9	7					2	8					1
	전라매일	3	3						2					1
	전라일보	2	2						1					1
	전북매일신문	2	2						1					1
	전북일보	11	11						2	2	3			4
	전북중앙신문	1	1						1					
	전주매일	6	6						4					2
	전주일보	2	2											2
	제주매일	1	1							1				
	제주신문	2	2								2			
	중도일보	2	2											2
	중부매일	2	2								2			
	충남일보	3	3						1					2
	충북일보	5	5						3		1			1
	충청매일	2	2						1		1			
	충청신문	2	2						1					1
	충청투데이	5	5						1					4
	한남일보	2	2						1					1
	한라일보	3	3								1			2
	현대일보	2	2						2					
	호남매일	3	3											3
	소계	228	217					11	104	5	26			93
경제지	뉴스토마토	1	1						1					
	매일경제	3	2	1					1		1			1
	머니투데이	2	2								1			1
	파이낸셜뉴스	7	7						4					3
	한국경제	5	5						3	1				1
	소계	18	17	1					9	1	2			6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스포츠지	스포츠동아	2	2						2					
	스포츠서울	2	2						1					1
	스포츠조선	1	1						1					
	소계	**5**	**5**						**4**					**1**
특수일간지	디지털타임스	2	2						2					
	소년조선일보	1		1										1
	에너지경제	3	3						1					2
	소계	**6**	**5**	**1**					**3**					**3**
외국어일간지	The Korea Times	2	1	1						1				1
	소계	**2**	**1**	**1**						**1**				**1**
무료일간지	메트로	2	2						1	1				
	이데일리	1	1						1					
	소계	**3**	**3**						**2**	**1**				
중앙방송	KBS-1·2TV	2		2								2		
	KBS-1TV	42	33	3			1	5	11	8	4	6		13
	KBS-2TV	7	6					1	5		1	1		
	MBC-TV	45	37	6		1	1		8	9	15	1	2	10
	SBS-TV	42	35	4	1		2		13	4	12	5		8
	소계	**138**	**111**	**15**	**1**	**1**	**4**	**6**	**37**	**21**	**32**	**15**	**2**	**31**
지방방송	MBC강원영동-TV	1	1											1
	MBC경남(진주,창원)	3	3								3			
	경인KBS-1TV	2	2						1					1
	광주KBS-1TV	1	1						1					
	광주MBC-TV	3	3						2					1
	대구MBC-TV	2	2											2
	부산KBS-1TV	2	2						1					1
	부산MBC-TV	1	1											1
	전주KBS-1TV	3	2	1					1					2
	전주MBC-TV	1	1								1			
	제주KBS-1TV	7	6	1						4	1			2
	제주MBC-TV	1	1						1					
	창원KBS-1TV	2	2											2
	청주KBS-1TV	5	5								5			
	소계	**34**	**32**	**2**					**7**	**4**	**10**			**13**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민방	CJB-TV	1	1								1			
	G1 강원민방-TV	5	5						2					3
	JIBS-TV	2	2						2					
	KBC-TV	11	11						10					1
	KNN	4	2		1			1	1					3
	OBS경인TV	3	2				1		2	1				
	TBC-TV	1	1											1
	TJB-TV	1	1								1			
	소계	**28**	**25**		**1**		**1**	**1**	**17**	**1**	**2**			**8**
케이블TV	CBS TV	3	3								3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2	2											2
	e채널	3	3											3
	NIB 뉴스	1	1						1					
	SBS Sports	1	1										1	
	YTN	22	15	4	2		1		6	3	2	3		8
	연합뉴스TV	24	4	20					1	1		22		
	티브로드-TV	3	3							3				
	현대홈쇼핑	1		1										1
	현대HCN관악방송	2	2									2		
	소계	**62**	**34**	**25**	**2**		**1**		**8**	**7**	**5**	**27**	**1**	**14**
종합편성채널	JTBC	48	33	10	3	1	1		18	3	7	10		10
	MBN	37	26	8		1	1	1	11	4	4	8		10
	TV조선	30	19	6		1	3	1	6		5	6		13
	채널A	38	33	4			1		12	2	9	6	2	7
	소계	**153**	**111**	**28**	**3**	**3**	**6**	**2**	**47**	**9**	**25**	**30**	**2**	**40**
뉴스통신	NSP통신	2	2								2			
	국제뉴스	12	12						3		3			6
	내외뉴스통신	1	1											1
	뉴스1코리아	63	54	6		3			13	5	7	10		28
	뉴시스	39	39						10	3	1	5		20
	서울뉴스통신	1	1						1					
	아시아뉴스통신	21	21						11					10
	연합뉴스	46	41	1			2	2	7	6	3	6		24
	소계	**185**	**171**	**7**		**3**	**2**	**2**	**45**	**14**	**16**	**21**		**89**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시사주간신문	일요서울	1	1						1					
	일요시사	3	3						3					
	일요신문	2	2											2
	중앙Sunday	1	1											1
	소계	**7**	**7**						**4**					**3**
지역주간신문	강화섬소식	1	1						1					
	경북자치신문	2	2						2					
	광양신문	1	1						1					
	남해시대	4	4								4			
	반월신문	2	2								2			
	북경기신문	2	2								2			
	서라벌신문	2	2								2			
	시민의소리	16	16						2	14				
	안성신문	1	1						1					
	연수신문	2	2							2				
	열린순창	2	2										2	
	영암신문	3						3						3
	원주신문	2	2								2			
	전남타임스	2	2											2
	주간 노령	3	3						3					
	주간당진시대	2	2						2					
	중원신문	2	2						2					
	청양신문	1	1						1					
	충청리뷰	5	5						2		2			1
	콩나물신문	1	1						1					
	하동군민신문	1	1						1					
	한길뉴스	2	2								2			
	한려투데이	5	5								5			
	해남신문	2	2						2					
	소계	**66**	**63**					**3**	**21**	**16**	**21**		**2**	**6**
특수주간신문	가스신문	2	2											2
	대한변협신문	1	1						1					
	더스쿠프	2	2											2
	미디어오늘	2	2							2				
	소상공인신문	3	3								1			2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특수주간신문	씨네21	2	2											2
	유교신문	4	4								4			
	장로신문	2	2								2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노보	1	1							1				
	전남기독신문	1	1						1					
	제주불교신문	2	2								2			
	주간침례신문	1	1						1					
	치과의사신문	2	2							2				
	치의신보	2	2								2			
	크리스챤타임	2	2						2					
	한국기독신문	3	3						3					
	한국대학신문	3	3						3					
	소계	**35**	**35**						**11**	**5**	**11**			**8**
시사주간지	시사뉴스	2	2							2				
	시사저널	7	7						5	2				
	시사IN	1	1											1
	주간경향	4	4								4			
	주간조선	1	1									1		
	한겨레21	10	10						7	3				
	소계	**25**	**25**						**12**	**7**	**4**	**1**		**1**
잡지	경제풍월	1	1						1					
	맘&앙팡	1		1										1
	시사매거진	2	2						2					
	여성조선	2	2						2					
	월간중앙	2	2						2					
	차의세계	1	1											1
	소계	**9**	**8**	**1**					**7**					**2**
인터넷신문	CBC뉴스	2	2											2
	CNN25	2	2											2
	닥터스뉴스	7	7								1			6
	e-시사통신	3	3											3
	뉴스앤조이	4	4						1	1				2
	e머니위크	6	6						1					5
	e머니투데이	32	28	4					3		4	9		16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e수원뉴스	1	1										1	
	e시사코리아저널	2	2						2					
	K신문	1	1											1
	kidok.com	2	2											2
	SSTV	4	4											4
	TK TIMES	2	2											2
	UGN경북뉴스	2	2											2
	(주)티비리포트	1	1											1
	게임플	1	1											1
	겜툰	2	2											2
	경기중앙신문	3	3											3
	경기IN	3	3											3
	경북장애인뉴스	1	1											1
	경인투데이뉴스	4	4						1					3
	경제투데이	2	2											2
	경찰투데이	2	2											2
	고발뉴스닷컴	2	2											2
	광명매일신문	2	2											2
	광명투데이신문	4	4						4					
	광양뉴스	1	1						1					
	광주투데이	2	2											2
	광주in	1	1						1					
	교회와신앙	1	1						1					
	굿데이뉴스	1	1						1					
	굿모닝논산	2	2						2					
	금융소비자뉴스	1	1								1			
	기독인 뉴스	1	1											1
	깊게 보는 개미뉴스	2	2						1					1
	남도타임즈	2	2									2		
	남원포유	2	2						2					
	남해타임즈	4	4								4			
	내외통신뉴스	2	2											2
	노컷뉴스	55	53	2					10	2	15	5		23
	뉴데일리	9	9						4	2				3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뉴데일리경제	8	8						2	2				4
	뉴민주신문	1	1											1
	뉴스셀	2	2						2					
	뉴스1스타	1	1											1
	뉴스미션	3	3											3
	뉴스뷰	3	3								3			
	뉴스쉐어	2	2						2					
	뉴스스토리	2	2											2
	뉴스천지	7	6	1					2	2		1		2
	뉴스캔	2	2											2
	뉴스코어	2	2											2
	뉴스퀵	2	2											2
	뉴스타운	3	3						1		2			
	뉴스타워	2	2											2
	뉴스타파	6	5		1				3	1	2			
	뉴스투데이24	2	2											2
	뉴스투데이한국	5	5						3			2		
	뉴스파워	2	2						2					
	뉴스핌	4	4											4
	뉴스호남	3	3						3					
	대전시티저널	7	7							2	1			4
	대한뉴스통신	4	4											4
	대한장애인신문온뉴스	3	3										1	2
	더코리아프레스	2	2											2
	더팩트	8	7	1								1		7
	데일리게임	2	2							2				
	데일리덴탈	2	2								2			
	데일리메디	2	2								2			
	데일리메일	2	2						2					
	데일리안	7	7						1			2		4
	데일리한국	3	2	1								1		2
	데일리환경	1				1								1
	돌직구뉴스	2	2											2
	디지털포천신문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디지털데일리	1	1						1					
	디지털함께걸음	1	1											1
	디트news24	2	2											2
	라포르시안	2	2						2					
	리폼드뉴스	1	1											1
	마로니에방송	1	1											1
	마이씨네	1	1											1
	매경닷컴	14	12	2					2	1	1	1	2	7
	메디칼타임즈	4	4						1			1		2
	메디컬투데이	2	2											2
	메디파나뉴스	2	2											2
	메디포뉴스	2	2											2
	몬스터짐	1	1								1			
	문화저널21	1	1											1
	문화투데이	1	1							1				
	미디어광명	2	2						2					
	미디어리포트	2	2									2		
	미디어스	13	12			1			8	1	3			1
	미디어와이	3	3											3
	미디어제주	2	2						2					
	미디어펜	8	8						4			2		2
	미디어하남	2	2						2					
	민족의 소리 서울의 소리	5	2				3		3		1			1
	민중언론참세상	2	2								2			
	민중의소리	3	3							1				2
	반론보도닷컴	4	4								4			
	법률정보신문	2	2											2
	복지TV한국웰페어뉴스	4	4											4
	부천매일	3	3							1				2
	불교닷컴	11	11						2		6			3
	불교포커스	2	2								2			
	불교플러스	2	2								2			
	불만닷컴	2	2							2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	6	6						5					1
	브레이크뉴스	9	9								2			7
	브레이크뉴스 대전충청	2	2											2
	블랙먼데이	1	1											1
	비마이너	9	9						8					1
	비전코리아 뉴스	2	2											2
	사건의내막	1	1											1
	사람일보	1	1											1
	서울일보닷컴	2	2											2
	세계닷컴	30	29	1					4	3	4	4		15
	세종데일리	1	1											1
	세종in뉴스	1	1						1					
	쉬핑데일리	1	1						1					
	스카이데일리	1	1											1
	스타뉴스	1	1											1
	스타엔	1	1											1
	스타투데이	2	2											2
	시민방송국Y	2	2						2					
	시사메디in	8	8							8				
	시사위크	3	3						1					2
	시사포커스신문	7	7											7
	시사IN Live	5	5								2			3
	시크뉴스	1	1											1
	씨네21뉴스서비스	2	2											2
	씨씨티브이뉴스	1	1						1					
	씨앤비뉴스	6	6											6
	아시아경제닷컴	19	18	1					5			1		13
	아시아엔	4	4							2				2
	아시아투데이닷컴	17	14	3					5		2	5		5
	아웃소싱타임스	2	2											2
	아이뉴스24	1	1											1
	아이크레뉴스	1	1											1
	아주뉴스	15	15						4					11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안산저널	3	3											3
	업다운뉴스	1	1											1
	업코리아	3	3								3			
	에듀인뉴스	2	2							2				
	에스티브이	3	3								1			2
	에이블뉴스	12	12						5		2			5
	엑스포츠뉴스	2	2											2
	엔디엔뉴스	4	4						2					2
	여성종합뉴스	7	7						6					1
	연합통신넷	2	2							2				
	예장뉴스	3	3						3					
	오마이뉴스	18	18						4		2	2		10
	오산인터넷뉴스	1	1						1					
	오에스이엔	4	4											4
	온라인중앙일보	44	42				2		8	6	7	1		22
	올인코리아	2	2											2
	우리들뉴스	3	3						2					1
	울산조은뉴스	6	6						6					
	월드투데이	1	1											1
	웰빙코리아뉴스	2	2									2		
	웰페어뉴스	5	5											5
	위키트리	1	1											1
	유앤앤	5	5						3					2
	의약뉴스	1	1											1
	의정부뉴스	2	2											2
	이헬스통신	1	1											1
	이뉴스투데이	7	7											7
	이슈타임	4	4											4
	이타임즈	1	1											1
	이투데이	8	6	1				1	1			1		6
	익산인터넷뉴스	2	2						1					1
	익산제일뉴스	2	2						1					1
	인권오름	2	2								2			
	인사이트	3	2	1										3
	인천뉴스	1	1								1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인터넷 가스신문	2	2											2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4	4						2					2
	인터넷 건설경제	1	1							1				
	인터넷 경기도정신문	3	3											3
	인터넷 경기리포트	3	3						3					
	인터넷 경기일보	13	13						3					10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5	5						3		2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2	2											2
	인터넷 경남매일	1	1						1					
	인터넷 경남신문	1	1											1
	인터넷 경남일보	1	1									1		
	인터넷 경양일보	3	3											3
	인터넷 경인매일	2	2											2
	인터넷 경인일보	10	9	1					2	2	3		1	2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3	3											3
	인터넷 경제풍월	1	1						1					
	인터넷 경향신문	42	41	1					12	2	9	5		14
	인터넷 광남일보	8	2					6	8					
	인터넷 광주매일신문	1	1						1					
	인터넷 광주일보	16	16						4					12
	인터넷 국민일보	23	23						3	3	6	3		8
	인터넷 굿모닝충청	2	2											2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인터넷 금강신문	2	2						2					
	인터넷 금강일보	2	2											2
	인터넷 금이성	1	1											1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2	2											2
	인터넷 기독일보	1	1											1
	인터넷 기자협회보	3	3						3					
	인터넷 길림신문해외판	2	2											2
	인터넷 김해뉴스	1	1											1
	인터넷 내외일보	6	6						3					3
	인터넷 뉴스토마토	7	7						6					1
	인터넷 대경일보	2	2											2
	인터넷 대구광역일보	2	2								2			
	인터넷 대전일보	5	5						1					4
	인터넷 대전투데이	2	2						2					
	인터넷 대한변협신문	1	1						1					
	인터넷 더데일리포커스	1	1											1
	인터넷 더스쿠프	2	2											2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2	2											2
	인터넷 동부교차로저널	3	3											3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3	3						1					2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10	10						8					2
	인터넷 매일신문	3	3						1					2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인터넷 매일일보	3	3											3
	인터넷 메디칼업저버	2	2											2
	인터넷 무등일보	3						3	3					
	인터넷 무예신문	1	1											1
	인터넷 물향기신문	1	1						1					
	인터넷 반월신문	2	2								2			
	인터넷 법보신문사	1	1							1				
	인터넷 베리타스알파	2	2											2
	인터넷 병원신문	1	1						1					
	인터넷 복지연합신문	5	5								2			3
	인터넷 부천신문	1	1								1			
	인터넷 북경기신문	2	2								2			
	인터넷 불교신문	1	1											1
	인터넷 새만금일보	3	3						2					1
	인터넷 새전북신문	3	3						1					2
	인터넷 서울경제	8	8						1	2				5
	인터넷 서울매일	1	1											1
	인터넷 서울신문	12	10	2					4			2		6
	인터넷 세종매일	4	4						2					2
	인터넷 소상공인신문	2	2											2
	인터넷 수도권일보	4	4						4					
	인터넷 수원일보	5	5						3		1			1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인터넷 스페셜경제	1	1											1
	인터넷 스포츠경향	6	6						2			2		2
	인터넷 스포츠동아	4	4						2					2
	인터넷 스포츠서울	4	4						2	2				
	인터넷 스포츠조선	7	7						1	2				4
	인터넷 스포츠한국미디어	1	1											1
	인터넷 시민의소리	16	16						2	14				
	인터넷 시민일보	4	4											4
	인터넷 시사뉴스	3	3						1	2				
	인터넷 시사매거진	2	2						2					
	인터넷 시사상조	4	4						3				1	
	인터넷 시사인천	3	3											3
	인터넷 시사저널	11	10	1					4	3	2			2
	인터넷 시사주간	1	1											1
	인터넷 시사i신문 연수신문	2	2							2				
	인터넷 신동아	2	2						2					
	인터넷 신아일보	4	4						2					2
	인터넷 아시아일보	2	2						2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7	7						6					1
	인터넷 안성신문	1	1						1					
	인터넷 에너지경제	8	8						2	1				5
	인터넷 여성신문	2	2									2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인터넷 영암신문	3						3						3
	인터넷 용인시민신문	2	2								2			
	인터넷 울진신문	1	1											1
	인터넷 위클리오늘	1	1											1
	인터넷 유교신문	4	4								4			
	인터넷 의정부신문	1	1											1
	인터넷 의학신문	1	1						1					
	인터넷 이데일리	6	5	1					1	2		1		2
	인터넷 이코노믹리뷰	2	2						2					0
	인터넷 천일보	17	17						5					12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3	3						1		2			
	인터넷 일간스포츠	6	6						1	2				3
	인터넷 일요서울	11	11						2		4			5
	인터넷 일요시사	14	14						10			1		3
	인터넷 일요신문	14	14						3	1		4	2	4
	인터넷 일요저널	2	2											2
	인터넷 장애인생활신문	1	1										1	
	인터넷 전국매일	1	1											1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7	7						6					1
	인터넷 전남매일	2	2						2					
	인터넷 전남일보	8	6					2	8					
	인터넷 전남타임스	2	2											2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인터넷 제주신문	1	1								1			
	인터넷 주간 고양신문	2	2						2					
	인터넷 주간 당진시대	2	2						2					
	인터넷 주간경향	3	3											3
	인터넷 주간현대	1	1											1
	인터넷 중도일보	1	1											1
	인터넷 중앙Sunday	1	1											1
	인터넷 중원신문	2	2						2					
	인터넷 청년의사	5	5						1					4
	인터넷 치과의사신문	2	2							2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1	1											1
	인터넷 콩나물신문	1	1						1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3	3											3
	인터넷 태권도신문	1	1											1
	인터넷 태권라인	1	1						1					
	인터넷 투데이광주하남	3	3											3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1	11						4					7
	인터넷 파이낸셜투데이	1	1						1					
	인터넷 팝콘뉴스	2	2											2
	인터넷 포천뉴스	4	4						1		2			1
	인터넷 하동군민신문	1	1						1					
	인터넷 한겨레	31	31						13	4	3	5		6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인터넷 한겨레21	11	11						7	3				1
	인터넷 한국일보	40	37	1				2	11	10	13			6
	인터넷 한길뉴스	2	2								2			
	인터넷 한남일보	3	3						1		1			1
	인터넷 한려투데이	4	4								4			
	인터넷 한의신문	1	1							1				
	인터넷 해남신문	2	2						2					
	인터넷 환경스포츠신문	2	2								2			
	인터넷 후생신보	1	1						1					
	인터넷 PD저널	3	3						3					
	인터넷 The Korea Times	2	1	1						1				1
	인터넷 강원일보	6	6						2					4
	인터넷 경북매일	3	3						3					
	인터넷 국제신문	3	3											3
	인터넷 기호일보	12	12						8					4
	인터넷 내일신문	3	3											3
	인터넷 뉴스신문고	5	5									2		3
	인터넷 데일리경제	1	1											1
	인터넷 동양일보	2	2								2			
	인터넷 메트로	8	7	1					1	1	2	3		1
	인터넷 문화일보	16	14	2					1	7	2	2		4
	인터넷 미디어오늘	22	22						5	8	4	4		1
	인터넷 부산일보	11	11											11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인터넷 영남일보	7	7								2			5
	인터넷 용인신문	1		1					1					
	인터넷 원주신문	2	2								2			
	인터넷 인천일보	3	3						1					2
	인터넷 전라일보	2	2						1					1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1	1						1					
	인터넷 전주매일	4	4						3					1
	인터넷 제주매일	1	1							1				
	인터넷 주간경향	5	4	1							4			1
	인터넷 주간동아	5	4	1					2				3	
	인터넷 주간조선	1	1									1		
	인터넷 중부매일	3	3						1		2			
	인터넷 중부일보	6	6						2	1	3			
	인터넷 충북일보	6	6						3		1			2
	인터넷 충청매일	3	3						1				2	
	인터넷 충청일보	2	2											2
	인터넷 충청투데이	3	3								2			1
	인터넷 한국기독신문	3	3						3					
	인터넷 한라일보	3	3								1			2
	인터넷 한려투데이	2	2						1		1			
	인터넷 헤럴드경제	15	15						5			2		8
	장애인뉴스	2	2											2
	전국뉴스	1	1											1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장애인뉴스	2	2											2
	전국뉴스	1	1											1
	전남인터넷신문	3	3											3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4	4							2				2
	전자신문인터넷	1	1											1
	제주의소리	2	2											2
	제천뉴스저널	2	2								2			
	제천사랑뉴스	2	2						2					
	조갑제닷컴	1		1					1					
	조선닷컴	45	44				1		9	4	4	9		19
	조선비즈닷컴	9	9						2	2	1			4
	조세일보	3	3							2				1
	종교신문	1	1											1
	주간 노령	2	2						2					
	중부미디어	2	2											2
	중부투데이	2	2						1					1
	지뉴스데일리	2	2											2
	지케이뉴스	2	2											2
	천안시민신문	2	2											2
	충남뉴스	2	2											2
	충북인뉴스	3	3								2			1
	칸투데이	1	1											1
	컨슈머타임스	2	2						2					
	코나스	1	1											1
	쿠키뉴스	14	13	1					2			3		9
	타임뉴스	3	3						2					1
	투데이코리아	2	2											2
	트래블데일리	2	2								2			
	티브이데일리	2	2											2
	파인뉴스	9	9									2	7	
	파인피플뉴스	2	2											2
	포천일보	2	2											2
	폴리뉴스	3	3											3
	푸드투데이	3	3								1			2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푸른한국닷컴	2	2								2			
	풋볼리스트	2	2						2					
	프라임경제	10	10						2	2				6
	프레시안	9	9						2					7
	하키뉴스코리아	1	1											1
	한강타임즈	4	4											4
	한경닷컴	6	6						3	1				2
	한국기독일보	2	2											2
	한국디지털뉴스	2	2											2
	한국무예신문	2	2						2					
	한국장애인뉴스	2	2											2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	2									2		
	헤럴드TV	1	1											1
	헬스코리아뉴스	6	6											6
	화순투데이	2	2									2		
	소계	1,766	1,703	34	1	2	7	19	481	145	209	106	21	804
인터넷뉴스서비스	iKNN	4	2		1			1	1					3
	iMBC	17	12	5					5	2	4	4		2
	KBS미디어	46	31	7			6	2	5	15	6	9		11
	SBS콘텐츠허브	38	33	3			2		7	5	8	8		10
	wow한국경제TV	5	4	1								1		4
	가자아이뉴스	1	1											1
	구글	4	4									4		
	네이버	13	12	1					3			4		6
	네이트	7	7									4		3
	다음	12	11	1					1			4		7
	인터넷 광주MBC	2	2						2					
	인터넷 서울신문 STV	1	1											1
	인터넷 연합뉴스TV	39	11	24			4		2	7		24		6
	인터넷 채널A	28	15	7			6		3	8	9	8		
	인터넷 평화방송	1	1											1
	인터넷 현대HCN충북방송	1	1											1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BBS불교방송	2	2											2
	인터넷 CTS기독교 TV	2	2								2			
	인터넷 G1 강원민방-TV	1	1						1					
	인터넷 KBC	9	9						8					1
	인터넷 OBS경인TV	4		3			1		2		2			
	인터넷 TBS	3	3									2		1
	인터넷 TV조선	26	10	7			8	1	3		15	6		2
	인터넷 JTBC	35	14	15	3	1	2		10	3		15		7
	인터넷 MBN	38	27	8			2	1	8	5	6	9		10
	인터넷 YTN	24	13	5	2		4		2	8		4		10
	줌	7	7									4		3
	풀빵닷컴	2	2											2
	소계	372	238	87	6	1	35	5	63	53	52	110		94
기타	남동사람들	1	1							1				
	발뉴스	2	2											2
	트위터매거진 새가날아든다	2	2											2
	XSFM	2	2											2
	소계	7	7							1				6
계		3,319	2,983	205	14	10	56	51	934	315	461	320	30	1,259

9. 중재부별 처리결과

서울중재부의 피해구제율은 2014년의 90.0%보다 10%P 이상 하락한 77.4%를 기록한 반면, 지역중재부의 피해구제율은 2014년의 70.0%보다 10%P 가까이 상승한 79.8%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서울중재부의 경우 서울제7중재부의 피해구제율이 9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제6중재부 81.2%, 서울제1중재부 80.6%, 서울제8중재부 7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중재부에서는 광주중재부가 100.0%로 가장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으며, 강원중재부 90.5%, 대전중재부 85.7%, 경기중재부 82.5%, 부산중재부 7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제7중재부의 피해구제율이 94.0%를 기록한 것은 구원파 관련 대량사건 상당건이 보도 또는 기사삭제 혹은 수정 등으로 일괄 타결되면서 피해구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재부의 조정성립률은 13.8%로 지역중재부의 35.7%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조정불성립 결정률은 서울중재부 13.8%, 지역중재부 12.7%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중재부의 취하율은 58.5%로, 지역중재부의 43.1%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구원파 대량사건 상당건이 일괄 타결되면서 신청인이 청구를 취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중재부의 기각율은 7.3%로, 지역중재부의 1.5%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 역시 세월호 관련 구원파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조정청구를 했다가 기각결정된 사건 대부분이 서울 지역 매체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재부 가운데 서울 제2중재부의 조정성립률이 23.3%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제3중재부 19.6%, 서울제8중재부 17.2%, 서울제5중재부 16.3% 등의 순이었다. 지역중재부 가운데 광주중재부의 조정성립률은 53.7%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중재부 42.9%, 충북중재부 36.6%, 전북중재부 35.9%, 경기중재부 34.4% 등의 순이었다.

표 2-9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구분 /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동의	이의					
2013	서울1	186	108		4		1		73 (58)	89.7
	서울2	158	69		2	25			62 (44)	71.5
	서울3	228	72	5	10	16 (1)	3		122 (108)	82.7

구분 /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동의	이의					
2013	서울4	272	92	8	7	4		1	160 (142)	89.3
	서울5	188	48	6	13 (1)	22 (9)	2	1	96 (79)	77.3
	서울6	286	146	6	3	4	8		119 (112)	95.0
	서울7	16	7						9 (4)	68.8
	서울8	472	132	11	8	117 (4)	5		199 (173)	68.5
	소 계	1,806	674	36	47 (1)	188 (14)	19	2	840 (720)	81.0
	부산	69	29	2		6			32 (14)	65.2
	대구	48	12		1	10			25 (13)	52.1
	광주	78	29	4	1	10			34 (29)	79.5
	대전	75	44			2	1		28 (9)	71.6
	경기	195	78	6	7	49			55 (51)	69.2
	강원	20	9			4			7 (6)	75.0
	충북	37	19	4		4			10 (4)	73.0
	전북	39	9	2	1 (1)	7			20 (9)	53.8
	경남	63	13			13			37 (29)	66.7
	제주	3				2			1	0.0
	소 계	627	242	18	10 (1)	107	1		249 (164)	67.9
	계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7.6
2014	서울1	2,014	73	19		6	21	2	1,893 (1,846)	97.3
	서울2	251	77	18	13	33 (1)	3	1	106 (80)	71.3
	서울3	354	109	21	16	74			134 (102)	65.5
	서울4	396	132	18	54	12		29	151 (137)	78.2
	서울5	2,201	145	18	20	453 (7)	19	34	1,512 (1,492)	77.4

구분 /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동의	이의					
2014	서울6	2,586	76	3	4	50	1	1	2,451 (2,381)	95.2
	서울7	7,243	64	7	1	27	1		7,143 (7,061)	98.5
	서울8	2,705	102	21	14 (3)	267 (8)	55	3	2,243 (1,807)	73.3
	소 계	17,750	778	125	122 (3)	922 (16)	100	70	15,633 (14,906)	90.0
	부산	138	54			4			80 (51)	76.1
	대구	113	32			11		1	69 (60)	82.1
	광주	83	29			23		3	28 (14)	53.8
	대전	96	46	4					46 (30)	83.3
	경기	548	118			55	2		373 (270)	71.1
	강원	16	4			4			8 (8)	75.0
	충북	71	22			9			40 (36)	81.7
	전북	53	15	2		8	4		24 (12)	59.2
	경남	150	48			68		2	32 (21)	46.6
	제주	30	10	2		1			17 (12)	80.0
	소 계	1,298	378	8		183	6	6	717 (514)	70.0
	계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2015	서울1	554	84	50	23 (2)	58	45	4	290 (271)	80.6
	서울2	232	54	16	12	42	11		97 (67)	62.0
	서울3	311	61		9	68	51	6	116 (78)	54.7
	서울4	353	43	17	12	37	70		174 (152)	74.9
	서울5	455	74	39	20	192 (2)	2	4	124 (104)	48.8
	서울6	543	68	7		69	5		394 (362)	81.2
	서울7	1,115	84	7	3	29	19	1	972 (938)	94.0

구분 /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동의	이의					
2015	서울8	662	114	37	11	88	104	2	306 (288)	79.0
	소 계	4,225	582	173	90 (2)	583 (2)	307	17	2,473 (2,260)	77.4
	부산	78	18			7 (2)			53 (41)	78.2
	대구	80	17			15			48 (41)	72.5
	광주	214	115	28			8	7	56 (56)	100.0
	대전	84	25	2		4			53 (45)	85.7
	경기	259	89	7	5	20	4	4	130 (111)	82.5
	강원	42	18			4			20 (20)	90.5
	충북	71	26			29		2	14 (14)	58.0
	전북	78	28	6		8	2	2	32 (23)	77.0
	경남	62	15			32	1		14 (13)	45.9
	제주	34	7	2	6	8			11 (9)	52.9
	소 계	1,002	358	45	11	127	15	15	431 (373)	79.8
	계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제3장 손해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 손해배상사건수 및 처리결과

2015년 손해배상청구건수는 모두 1,560건으로, 전체 조정청구건수 대비 29.8%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 이래 매년 30%대의 비율을 유지하던 것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2011년 37.8%였던 청구 비율은 2012년 33.1%, 2013년 32.2%, 2014년 30.1%를 기록한데 이어 2015년도에는 20%대를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조정성립 17.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8.5%, 조정불성립 결정 15.7%, 취하 44.4% 등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반면, 취하율은 30%P 이상 감소했다. 이처럼 취하 비율이 낮아진 것은 2014년의 경우 구원파 관련 대량사건 4,670건 중 4,389건이 취하된 반면, 2015년의 경우 구원파 관련 대량사건 중 손해배상청구사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중 손해배상사건은 1,210건이 청구되었고 이 중에서 267건(22.1%)은 조정성립, 132건(10.9%)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82건(15.0%)은 조정불성립결정, 209건(17.3%)은 기각, 그리고 409건(33.8%)은 취하되었다. 구원파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 상당수가 기각된데 따른 기각 비율이 매우 높았다.

표 3-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수 및 비율 (2013. 1. 1. ~ 2015. 12. 31.)

구분 / 연도	전체 조정 청구건수	손해배상청구건수
2013	2,433	784 (32.2)
2014	19,048	5,725 (30.1)
2015	5,227	1,560 (29.8)

※ ( ) 안의 숫자는 %

표 3-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구분 /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3	784 (100)	258 (32.9)	17 (2.2)	15 (1.9)	121 [6] (15.4)	6 (0.8)		367 [300] (46.8)	74.7
2014	5,725 (100)	393 (6.9)	44 (0.8)	49 [1] (0.9)	414 [7] (7.2)	80 (1.4)	36 (0.6)	4,709 [4,350] (82.3)	85.5
2015	1,560 (100)	269 (17.2)	94 (6.0)	39[1] (2.5)	245[2] (15.7)	210 (13.5)	11 (0.7)	692 [612] (44.4)	73.0

※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 안의 숫자는 %

2.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15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은 평균 약 12,958만원으로 2014년에 비해 세 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에 비해서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특정인이 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평균액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청구 최저액은 2원이며, 중앙액은 2천만원으로 2014년과 동일했다.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분포되었으며, 중앙액은 100만원이었고 평균액은 약 160만원이었다. 중앙액은 2014년과 같았으나, 평균액은 2014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 이후 운영하던 손해배상청구사건 전담중재부 지정을 해제하였으나, 적정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를 통해 손해배상 사건의 공평한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그간 손해배상 전담중재부에서 축적하였던 처리 노하우를 모든 중재부가 공유함으로서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자고 하였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2015년 손해배상청구 1,210건 가운데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100건으로 8.3%를 차지하였다.

표 3-3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액 현황 (2013. 1. 1. ~ 2015. 12. 31. 단위 : 원)

구 분 / 연 도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2013	100,000	5,815,000,000	60,756,386	20,000,000
2014	20,000	10,000,000,000	36,789,730	20,000,000
2015	2	60,000,000,000	129,582,591	20,000,000

표 3-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13. 1. 1. ~ 2015. 12. 31. 단위 : 원)

구 분 / 연 도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2013	100,000	20,000,000	2,532,000	1,750,000
2014	50,000	30,000,000	1,953,000	1,000,000
2015	500,000	4,000,000	1,602,000	1,000,000

표 3-5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2013. 1. 1. ~ 2015. 12. 31. 단위 : 원)

구 분 / 연 도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합계
2013	13 (14.9)	27 (31.0)	35 (40.2)	7 (8.1)	5 (5.8)	87 (100.0)
2014	43 (38.4)	32 (28.6)	27 (24.1)	8 (7.1)	2 (1.8)	112 (100.0)
2015	23 (23.0)	28 (28.0)	49 (49.0)	–	–	100 (100.0)

■ 손해배상사례 1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A방송사는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기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들의 숙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ㄱ 씨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ㄱ 씨는 촬영 및 보도에 동의하지 않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드러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ㄱ 씨의 피해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손해배상액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양 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 손해배상사례 2 [성명권 침해]

B언론사는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피해와 관련된 방송에서 ㄴ 씨의 실명과 나이가 명시된 판결문을 노출시켰다. 이에 ㄴ 씨는 성명권이 침해되었고 해당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손해배상액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침해 유형별 손해배상 조정액을 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최고 300만원, 최저 50만원, 평균 145만원,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400만원, 최저 50만원, 평균 약 157만원, 음성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300만원, 최저 50만원, 평균 175만원이었다. 또한 성명권 침해의 경우는 한 건이 15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사생활 침해는 최고 300만원, 최저 50만원, 평균 약 163만원이었다. 또한 재산상 손해의 경우 최고 300만원, 최저 200만원, 평균 약 233만원으로 침해법익 유형중 가장 높은 평균 조정액을 보였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의 최저 손해배상액이 50만원으로 동일하였다.

표 3-6 2015년도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5. 1. 1. ~ 2015. 12. 31. 단위 : 원)

조정액 / 침해유형	인용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15	500,000	3,000,000	1,450,000	1,0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27	500,000	4,000,000	1,572,000	1,000,000	500,000
음성권 침해	4	500,000	3,000,000	1,750,000	1,750,000	
성명권 침해	1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사생활 침해	47	500,000	3,000,000	1,625,000	1,000,000	1,000,000
재산상 손해	6	2,000,000	3,000,000	2,333,000	2,000,000	2,000,000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81.1%인 1,2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침해 200건(12.8%), 사생활 침해 53건(3.4%), 재산상 손해 21건(1.3%) 등의 순이었다. 명예훼손의 경우 2014년의 95.9%에 비해 10%P 이상 하락한 반면, 초상권 침해의 경우 2014년 3.5%였던 비율이 무려 10%P 가까이 상승하였다.

명예훼손 사건의 처리결과는 취하가 51.5%로 가장 많았고, 조정성립 17.4%, 조정불성립결정 17.2% 등의 순이었다. 명예훼손 사건의 취하율이 높은 것은 세월호 관련 대량사건 모두 명예훼손 사건으로 조정신청 후 또는 심리를 통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 게재 혹은 기사삭제나 기사수정이 이뤄지는 매체에 대해서는 즉시 취하했기 때문이다.

초상권 침해 사건의 처리결과는 기각이 65.0%로 가장 많았고, 취하 13.0%, 조정성립 12.0% 순이었다. 기각 비율이 높은 것은 세월호 관련 구원파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청구한 사건 대부분이 기각된데 따른 것이다.

재산상 손해 사건의 처리결과는 조정성립이 52.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강력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상호 등이 노출돼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3-7 2015년도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구분 /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명예훼손	1,265 (100)	220 (17.4)	85 (6.7)	218 (17.2)	80 (6.3)	10 (0.8)	652 (51.5)
초상권 침해	200 (100)	24 (12.0)	9 (4.5)	10 (5.0)	130 (65.0)	1 (0.5)	26 (13.0)
음성권 침해	14 (100)	7 (50.0)	2 (14.3)				5 (35.7)
성명권 침해	7 (100)	3 (42.9)					4 (57.1)
사생활 침해	53 (100)	4 (7.5)	34 (64.2)	14 (26.4)			1 (1.9)
재산상 손해	21 (100)	11 (52.4)	3 (14.3)	3 (14.3)			4 (19.0)
계	**1,560 (100)**	**269 (17.2)**	**133 (8.5)**	**245 (15.7)**	**210 (13.5)**	**11 (0.7)**	**692 (44.4)**

※ ( ) 안의 숫자는 %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개인이 신청한 건은 894건, 단체가 신청한 건은 666건으로 개인 신청이 훨씬 많았다. 개인의 경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구원파 신도 개인들이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청구한 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단체의 경우 종교단체가 355건으로 전체 신청의 22.8%, 단체 신청의 53.3%를 차지했는데 이 역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종교 단체가 대량으로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일반단체가 150건, 기업체 92건, 지자체 22건, 언론사 및 공공단체 각 16건 등의 순이었다.

개인 신청의 경우는 취하가 279건(31.2%)로 가장 높았고, 기각 204건(22.8%), 조정성립 172건(19.2%), 조정불성립결정 125건(14.0%) 등의 순이었다.

중교단체의 경우는 취하가 284건(80.0%)로 가장 높았고, 조정불성립결정이 65건(18.3%)로 뒤를 이었다. 일반단체 역시 취하가 75건(50.0%)로 가장 높았고, 조정성립 41건(27.3%), 조정불성립결정 23건(15.3%) 등의 순이었다.

표 3-8 2015년도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구분 / 신청인 유형	청구건수	처리결과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개인	894(100)	172(19.2)	104(11.6)	125(14.0)	204(22.8)	10(1.1)	279(31.2)
지자체	22(100)	8(36.4)	3(13.6)	6(27.3)			5(22.7)
공공단체	16(100)	2(12.5)	7(43.8)				7(43.8)
일반단체	150(100)	41(27.3)	9(6.0)	23(15.3)	1(0.7)	1(0.7)	75(50.0)
종교단체	355(100)	4(1.1)	1(0.3)	65(18.3)	1(0.3)		284(80.0)
기업체	92(100)	31(33.7)	3(3.3)	16(17.4)	4(4.3)		38(41.3)
언론사	16(100)	4(25.0)	5(31.3)	7(43.8)			
교육기관	15(100)	7(46.7)	1(6.7)	3(20.0)			4(26.7)
계	1,560(100)	269(17.2)	133(8.5)	245(15.7)	210(13.5)	11(0.7)	692(44.4)

※ ( ) 안의 숫자는 %

제4장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인터넷신문은 지난 2005년 시행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조정·중재 대상 매체에 새로 포함되었다.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신청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모든 매체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2015년의 경우 전체 청구사건 중 47.6%인 2,490건이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으로 2014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으나,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만을 살펴보면 2014년의 1,501건보다 대폭 증가한 1,766건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하였다.

인터넷신문의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가 57.3%(1,427건)로 가장 높았으며, 조정성립 19.4%(482건), 조정불성립결정 306건(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의 피해구제율은 2014년의 90.3%보다는 다소 하락한 79.3%였으며, 2013년의 78.8%보다는 다소 높았다.

표 4-1 최근 3년간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구분 /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3	1,130 (100)	420 (37.2)	20 (1.8)	29 [1] (2.5)	139 [2] (12.3)	5 (0.4)		517 [443] (45.8)	78.8
2014	8,436 (100)	665 (7.9)	60 (0.7)	77 [3] (0.9)	473 [4] (5.6)	45 (0.5)	52 (0.6)	7,064 [6,799] (83.7)	90.3
2015	2,490 (100)	482 (19.4)	91 (3.7)	55 [2] (2.2)	306 [4] (12.3)	108 (4.3)	21 (0.8)	1,427 [1,293] (57.3)	79.3

※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 안의 숫자는 %

제5장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인터넷 포털 및 방송사 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해졌다.[4)]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신청건수는 2011년 510건을 기점으로 2012년 454건, 2013년 369건 등 최근 3년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4년에는 4,171건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799건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이는 세월호 사건 관련 대량신청이 줄어든데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이 급감한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14년 21.9%를 기록했던 점유 비율은 2015년에는 15.3%로 낮아졌으며, 이는 2013년의 15.2%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2%로, 2012년 18.9%, 2013년 15.2%, 2014년의 14.8%였던 것을 감안할 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은 감소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웃링크[5)] 기사의 경우 기사제공 언론사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게시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도 자동으로 이를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아웃링크 기사에 대해 별도로 조정을 신청할 실익이 없다고 여기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인링크[6)] 기사에 대해서만 조정을 신청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5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가 474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세월호 관련 대량사건 상당수가 보도 내지 기사삭제 혹은 수정 후 취하되었기 때문이다. 뒤이어 기각 110건(13.8%), 조정불성립결정 99건(12.4%), 조정성립 63건(7.9%)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율은 2014년 87.2% 보다 감소한 80.1%를 기록했다. 비록 감소세에 있기는 하나 전체 매체유형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80%대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

4)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포털 등의 전자간행물을 의미하며, 언론중재법 시행령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시켰다.

5) 아웃링크 : 포털에서 검색된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제공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에 링크를 시켜줌

6) 인링크 :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한 보도를 포털이 자사의 뉴스섹션에 별도로 게재함

표 5-1 최근 3년간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구분 /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3	369 (100)	85 (23.0)	2 (0.5)	1 (0.3)	15 [4] (4.1)	1 (0.3)		265 [237] (71.8)	89.1
2014	4,177 (100)	100 (2.4)	29 (0.7)	10 (0.2)	209 [7] (5.0)	12 (0.3)	15 (0.4)	3,802 [3,481] (91.0)	87.2
2015	799 (100)	63 (7.9)	45 (5.6)	8 (1.0)	99 (12.4)	110 (13.8)		474 [444] (59.3)	80.1

※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 안의 숫자는 %

제6장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중재제도는 당사자 합의를 우선시 하는 조정과는 달리 중재부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결정을 내려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도입 이후 2008년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중재건수는 모두 31건으로 제도 활용이 다소 미진했으나 2009년부터 위원회 중점추진과제로 중재제도 활성화를 선정하고 중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 111건, 2010년 77건, 2011년 113건, 2012년 59건, 2013년 190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 중재로 전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사건들이 많아 접수건수는 26건을 기록하였다. 2014년의 11건에 비해 다소 증가하기는 했으나 2014년 이전에 비하면 최근 2년간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중재제도는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발생 이전에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맺거나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나 언론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거의 없어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재로 전환이 용이한 사건은 추후보도사건 등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건이나 언론사가 스스로 오보를 인정한 사건, 유사한 내용이 여러 인터넷 매체에 동시에 보도된 사안을 중심으로 청구되는 경향이 있다.

1. 침해 유형별 현황

중재사건의 침해 유형별 신청 현황을 보면 26건 모두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었다.

표 6-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구분 / 연도	청구 건수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2013	190	188					2
2014	11	11					
2015	26	26					

2. 청구권별 현황

중재사건의 청구권별 신청 현황을 보면 11건(42.3%)이 정정보도였으며, 반론보도 7건(26.9%), 추후보도 6건(23.1%), 손해배상 2건(7.7%)였으며, 26건 모두 중재결정되었다.

표 6-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및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구분 / 연도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13	정정	77	77				
	반론	59	59				
	추후	33	33				
	손배	21	19	2			
	계	190	188	2			
2014	정정	11	8				3
	반론						
	추후						
	손배						
	계	11	8				3
2015	정정	11	11				
	반론	7	7				
	추후	6	6				
	손배	2	2				
	계	26	26				

3. 매체 유형별 현황

중재사건의 매체 유형별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15건(57.7%), 신문 5건(19.2%), 방송 4건(15.4%) 등의 순이었다. 2014년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5년의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단 1건만을 기록했다.

표 6-3 매체 유형별 중재신청 현황 (2013. 1. 1. ~ 2015. 12. 31.)

구분 / 연도	청구건수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신문	신 문	뉴스 통신	방 송
2013	190	72	104	2	8	4
2014	11	10	1			
2015	26	1	15	5	1	4

제7장 자동소제기 현황

2015년 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가 신청되어 자동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100건으로 2014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특정 기관이 한 매체를 상대로 다량의 조정청구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40건이 자동소제기 된 데 따른 건수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2015년의 자동소제기 건수는 비교적 많다고 할 수 있다.

자동소제기된 100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1심 재판 결과 인용되거나 화해권고 결정 또는 조정성립된 사건이 2건, 취하된 사건이 31건,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67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현재 계속 중에 있다.

표 7-1 최근 3년간 자동소제기 현황 및 1심 법원 판결결과 현황 (2013. 1. 1. ~ 2015. 12. 31.)

구분 / 연도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각하	계속
2013	60	38	1	19	2	10	45	5	37	17	6	
2014	119	60	10	48	1	9	62	48	17	27	14	61
2015	100	52	11	36	1	39	50	11	2	31		67
계	279	150	22	103	4	58	157	64	56	75	20	128

※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성립은 인용에 포함하였음

자동소제기된 사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신문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방송 11건, 일간지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각 10건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MBC-TV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겨레, 한국일보, 제주KBS-1TV, 노컷뉴스, 뉴스1코리아, 인터넷 한국일보, iMBC가 각 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표 7-2 2015년도 매체별 자동소제기현황

(2015. 1. 1. ~ 2015. 12. 31.)

매체 유형	매체명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인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각하	계속
중앙 일간지	경향신문	1	1				1						1
	문화일보	1	1				1						1
	한겨레	4	2	1	1		1	3					4
	한국일보	4	2		2			4			4		
지역 일간지	경인일보	2			1	1	2						2
주간지	시사뉴스	2	1		1		2						2
	한겨레21	2	1	1			2						2
특수 주간 신문	치과의사신문	2	1		1			2					2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노보	1	1					1					1
중앙 방송	KBS-1TV	3	1	1	1				3				3
	MBC-TV	6	5		1			3	3		2		4
	SBS-TV	2	1		1			2					2
지역 방송	제주 KBS-1TV	4	2		2			2	2		2		2
종합 편성 채널	MBN	2	1		1			2		1			1
인터넷 신문	남동사람들	1	1				1						1
	노컷뉴스	4	1	1	2			2	2		2		2
	뉴스1코리아	4	2		2		2	2			2		2
	데일리게임	2	1		1			2			2		
	미디어스	1	1				1						1
	민중의소리	1	1					1			1		
	시사메디IN	2	1		1			2					2
	에너지경제	2	1		1			2			2		
	연합통신넷	2	1		1		2						2
	온라인 중앙일보	2	1		1		2				2		
	인터넷 문화일보	1	1				1						1
	인터넷 법보신문	3	1	1	1		2	1					3
	인터넷 스포츠서울	2		1	1		2				2		
	인터넷 스포츠조선	2		1	1		2				2		
	인터넷 시사뉴스	2	1		1		2						2
	인터넷 시사저널	1	1					1					1
	인터넷 이데일리	2		1	1		2				2		

매체 유형	매체명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인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각하	계속
	인터넷 일간스포츠	2		1	1		2				2		
	인터넷 치과의사신문	2	1		1			2					2
	인터넷 한겨레	3	1	1	1		1	2					3
	인터넷 한겨레21	2	1	1			2						2
	인터넷 한국일보	4	2		2			4			4		
	인터넷 한의신문	1	1					1					1
	조선비즈닷컴	2	2				2						2
	조세일보	2	1		1		2						2
	프라임경제	2	1		1		2						2
인터넷 뉴스 서비스	iMBC	4	4					3	1				4
	KBS미디어	2	1		1			2					2
	SBS 콘텐츠허브	2	1		1			2					2
	인터넷 MBN	2	1		1			2		1			1
계		100	52	11	36	1	39	50	11	2	31	0	67

제8장 복제기사 및 댓글 피해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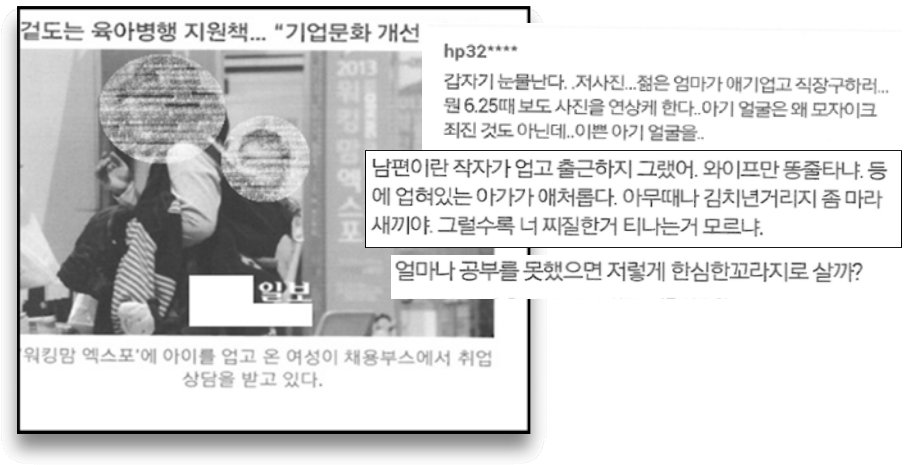
2015년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언론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조정청구로 이어졌다. 특히 원 언론보도가 포털의 블로그·카페 등에 전파되어 피해가 확산되거나 댓글로 인한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증가하였다.

위원회는 현행 언론중재법상 이러한 복제 기사나 댓글 등에 대한 완전한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양 당사자간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합의 의사가 있다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아래 사례는 당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침해를 방지하고자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한 것이며, 이 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사건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건 대부분이 위원회의 적극적 피해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언론중재법상 미비점으로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향후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취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 사례의 심리 시 당사자에게 권고하고 합의 및 결정 문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법률 보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복제기사, 댓글 피해구제



신청인은 아기를 업고 '워킹맘 엑스포'에 참석한 것을 원 언론사가 동의 없이 촬영·게재하였고, 특히 이를 매개한 포털에 악의적 댓글이 게재되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였다. 중재부는 원 언론사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액 150만원을 지급하고, 원 언론사는 포털 댓글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어 검색되지 않도록 해당 포털사에 요청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양 당사자의 동의로 확정되었고, 포털은 원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댓글을 삭제하였다.

연도별 언론조정·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표 1 조 정

(1981. 3. 31. ~ 2015. 12. 31.)

구분 /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1981	44	9			12(5)	1	2	20(2)	39.0
1982	50	19			19(5)		2	10(4)	58.3
1983	71	21			22(7)	1	1	26(8)	52.2
1984	54	12			29(8)	3		10(5)	49.0
1985	59	12			28(5)	4		15(7)	43.6
1986	49	14			10(2)	1		24(11)	56.3
1987	47	10			9(4)	1		27(2)	34.8
1988	55	16			12(5)		1	26(13)	63.0
1989	121	29			35(10)		6	51(21)	52.2
1990	159	42			43(10)	1	2	71(40)	59.0
1991	220	52			48(9)	3	1	116(43)	48.1
1992	381	81			79(12)	19		202(107)	55.2
1993	423	132			96(16)	8	2	185(84)	56.2
1994	541	162			127(10)	7		245(128)	56.2
1995	528	111			150(25)	26	3	238(124)	52.1
1996	556	129	2	7(1)	169(21)	9	1	239(137)	53.1
1997	490	161	10	5(1)	79(13)	8	4	223(108)	61.3
1998	602	226	14	10(2)	97(8)	5		250(106)	59.6
1999	641	244	11	18(2)	102(17)	24	5	237(92)	59.8
2000	607	198	10	15(2)	66(10)	14	2	302(156)	63.6
2001	659	229	6	23(3)	132(27)	18	2	249(133)	62.3
2002	511	182	18	17(3)	62(9)	8	1	223(101)	62.4
2003	724	287	15	15(1)	101(11)	27	3	276(158)	68.0
2004	759	283	46	22(6)	140(12)	13		255(148)	66.4
2005	883	334	31	20(4)	181(1)	19	15	283(160)	62.4
2006	1,087	356	29	28	226(2)	22	13	413(250)	60.6
2007	1,043	359	22	32(2)	194(5)	42	6	388(257)	64.8
2008	954	402	35	17	125(3)	21	4	350(237)	72.9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361)	73.9
2010	2,205	630	109	40(2)	157(5)	137	1	1,131(891)	79.2
2011	2,124	725	65	40(3)	285	44	14	951(680)	71.3
2012	2,401	805	76	66	427(10)	44	11	972(787)	71.5
2013	2,433	916	54	57(2)	295(14)	20	2	1,089(884)	77.6
2014	19,048	1,156	133	122(3)	1,105(16)	106	76	16,350(15,420)	88.7
2015	5,227	940	218	101(2)	710(4)	322	32	2,904(2,633)	77.9
계	47,329	9,822	970	694(39)	5,460(321)	1,235	222	28,926(24,298)	77.3
	100%	20.8%	2.0%	1.5%	11.5%	2.6%	0.5%	61.1%	

※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표 2 **중 재** (2005. 7. 28. ~ 2015. 12. 31.)

구분 / 연도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2005	0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65	46				
2010	77	76		1			
2011	113	107				6	
2012	59	59					
2013	190	188	2				
2014	11	8				3	
2015	26	26					
계	618	560	48	1		9	
	100%	90.6%	7.8%	0.2%		1.5%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 현황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치로, 언론사의 자율규제나 조정·중재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의 역할을 해왔다.

위원회는 2014년 12월 15일 기사 형태로 광고를 게재하는 '기사형 광고'의 법익침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하였다.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심의 대상 전 매체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 유형, 지면, 광고 대상 상품 유형, 바이라인(기자명이 적시된 기사) 기재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대상 매체 중 기사형 광고는 총 3,329건이 확인되었으며, 일간지의 경우 주로 신제품 소개형태로 게재되고 있었고, 인터넷신문의 경우 유통업체나 신상품 소개형 기사와 기존 상품 홍보가 대부분이었다. 특이한 점은 모두 바이라인을 명시한 상태로 게재되고 있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유관기관 심의규정과 사례, 외국의 법령과 기준 등을 참고해 '기사형 광고' 심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심의는 형식적 기준, 내용적 기준, 업종별 기준을 모두 고려해 이루어졌으며 명백한 사안을 위반한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총 1,300여 개 매체를 심의해 438건의 법익 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4년 12월 성폭력 피해자 보호기준 강화, 여론조사 공표기준 개정, 기사형 광고 심의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2014년의 302건에 비해 136건(45.0%)이 늘어났다. 특히 기사형 광고 위반으로 95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함에 따라 시정권고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1. 침해 유형별 현황

2014년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건수는 108건으로, 2014년 46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사생활 침해 시정권고 건이 2014년 25건에서 2015년 92건으로 늘어난데 기인한다. 이처럼 사생활 침해 건수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위원회가 2014년 12월 인격영역의

보호를 위해 사생활 보호 관련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공인의 사적인 생활영역까지 침범해 촬영, 보도한 사례 및 일반인의 초상을 그대로 보도한 사례에 대해 대거 시정권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피의자·피고인 신원을 공개해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보도는 2013년 35건에서 2014년 16건으로 급감한데 이어 2015년에는 단 5건에 그치는 등 대폭 감소하였다. 위원회의 지속적인 시정권고로 언론사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건수는 2015년 330건으로, 2014년의 256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범죄수법을 상세하게 묘사한 보도 및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다소 감소한 반면 마약 및 약물보도 관련 시정권고 건수가 2014년 75건에서 2015년 135건으로 크게 증가한데다,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면서 2015년 한해 95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마약류 관련 보도가 급증한 이유는 일선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사건 수사 발표를 하면서 배표한 보도자료에 용량·용법 및 특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공개하고 이를 언론이 보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시정권고한 덕분에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죄수법의 상세묘사에 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14년 60건에서 2015년 16건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자살 관련 보도도 2014년 73건에서 2015년 62건으로 줄어드는 등 시정권고로 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충격 및 혐오감을 주는 보도는 2014년 13건에서 2015년에는 14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도 \ 침해유형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침해 등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기타	재난 보도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충격 혐오감	기사형 광고	기타	
2013	289 (100)	23 (8.0)	35 (12.1)	1 (0.3)		31 (10.7)	78 (27.0)	89 (30.8)	32 (11.1)			
2014	302 (100)	25 (8.3)	16 (5.3)	5 (1.7)	29 (9.6)	60 (19.9)	73 (24.2)	75 (24.8)	13 (4.3)		6 (2.0)	
2015	438 (100)	92 (21.0)	5 (1.1)	11 (2.5)		16 (3.7)	62 (14.2)	135 (30.8)	14 (3.2)	95 (21.7)	8 (1.8)	

※ ( ) 안의 숫자는 %

2. 매체 유형별 현황

2014년 한 해 동안 내려진 438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297건(6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간지 84건(19.2%), 뉴스통신 44건(10.0%), 주간지 10건(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8.9%에서 67.8%로 대폭 증가한 반면, 중앙 일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5.6%에서 8.0%로 다소 낮아졌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비중이 높은 것은 전체 심의대상 매체 중 인터넷신문의 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인터넷신문 가운데 다수를 이루는 신생 매체가 각종 법익 침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지면 제한이 없다는 특성에 기인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페이지뷰를 늘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향도 있었으며, 어뷰징한 기사도 많아 이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졌다.

표 2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3. 1. 1. ~ 2015. 12. 31.)

구분 / 연도	총 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13	289 (100)	29 (10.0)	44 (15.2)	2 (0.7)		27 (9.3)	187 (64.7)
2014	302 (100)	47 (15.6)	37 (12.3)	4 (1.3)		36 (11.9)	178 (58.9)
2015	438 (100)	35 (8.0)	49 (11.2)	10 (2.3)	3 (0.7)	44 (10.0)	297 (67.8)

※ ( ) 안의 숫자는 %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표 1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15. 12. 31.)

구분 / 연도	계	침해 유형														종 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송
		사생활 침해 등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고소 고발 보도	재난 보도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충격 혐오감	기사형 광고	기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4			2											3	2	1			
1988	37	16	3		9									9		29	2	2	4		
1989	180	36	92		52											173	1		6		
1990	311	67	169	12	63											301	1		9		
1991	264	34	140	16	70						1			3		247	8	3	6		
1992	390	34	227	3	123									3		379			11		
1993	344	10	228		106											336	1		7		
1994	204	7	132		58						7					195	1		8		
1995	282		131		29						121			1		271	1		10		
1996	310	11	122	22	26	8				4	117					304		1	5		
1997	469	2	76	182	21	78					109			1		461	1		7		
1998	348		29	151	16	14				1	137					336	2	2	8		
1999	240		20	126	17	11					66					234			6		
2000	234	2	8	67	54	6					97					213	4		17		
2001	231	1	9	70	22	10					119					211	7		13		
2002	142	1		88	9						44					129	1		12		
2003	237	2	41	153	13	1					20			7		219	2		16		
2004	283	2	114	68	7	1				21	52			18		247	14	1	21		
2005	278	10	88	24	11					85	47			13		246	8	1	19	3	1
2006	190	3	69	23	4	2			6	73	10			1		150	9		15	16	
2007	202	14	80	21	1	2				44	30	7		3		127	11	1	20	43	
2008	289	30	48	8	4				62	97	27	4		9		124	19	1	31	112	2
2009	253	14	97	6		1			2	93		2		37		57	15		20	132	29
2010	284	10	49	2	2				17	199	4			1		96	14	5	20	149	
2011	426	36	100		2				4	189	95					106	20	1	41	253	5
2012	259	5	40		5	3			40	49	116			1		74	3	1	21	160	
2013	289	23	35			1			31	78	89	32				73	2		27	187	
2014	302	25	16		5			29	60	73	75	13		6		84	4		36	178	
2015	438	92	5			10	1		16	62	135	14	95	8		84	10	3	44	297	
계	7,728	494	2,168	1,042	731	148	1	29	238	1,068	1,518	72	95	124		5,510	165	26	460	1,530	37
	100%	6.4%	28.1%	13.5%	9.5%	1.9%	0.0%	0.4%	3.1%	13.8%	19.6%	0.9%	1.2%	1.6%		71.3%	2.1%	0.3%	6.0%	19.8%	0.5%